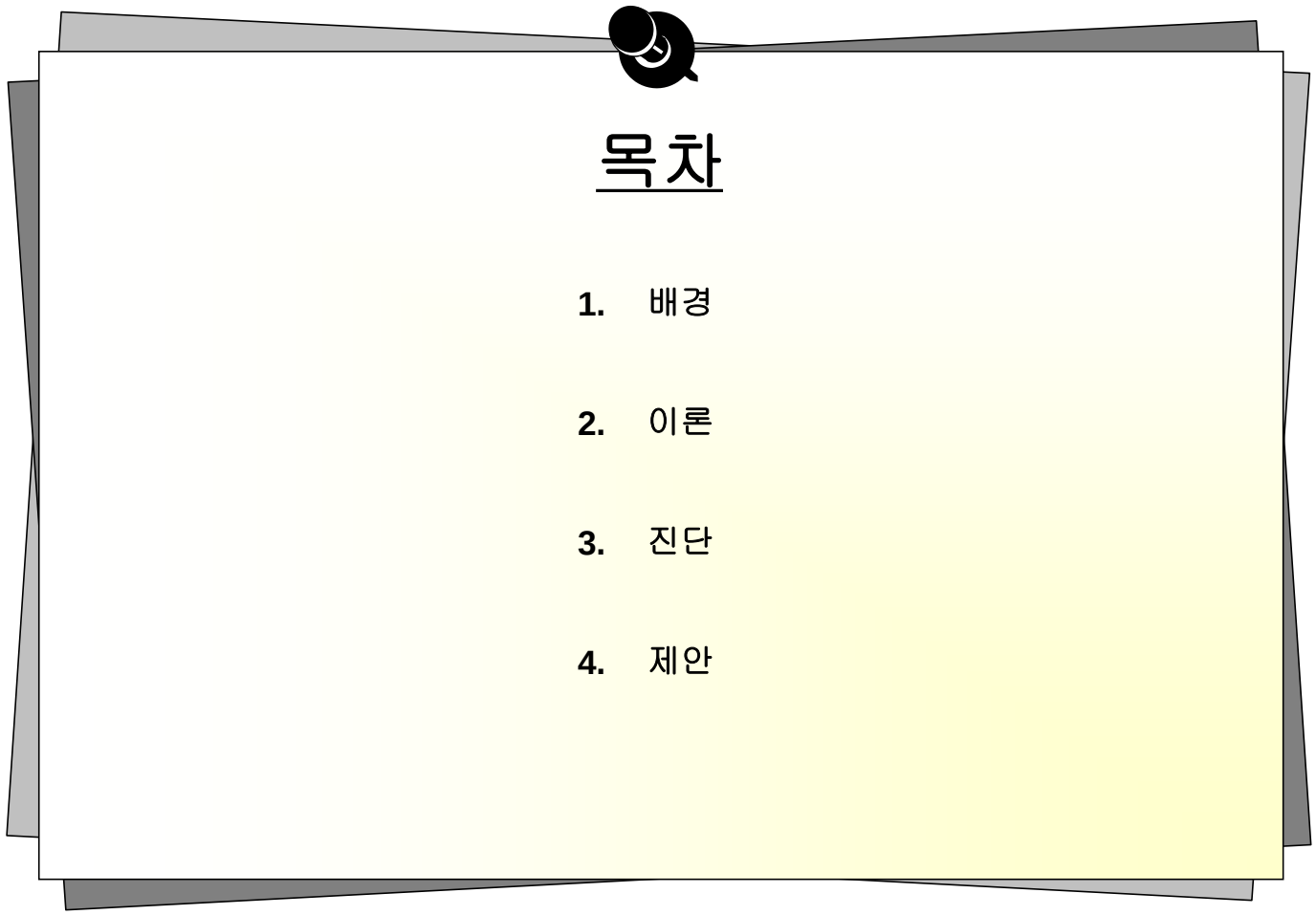
세계인의 날
기획세미나 발표자료

발표자료

이민정책 조직체계 개편 방안

권향원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목차

1. 배경
2. 이론
3. 진단
4.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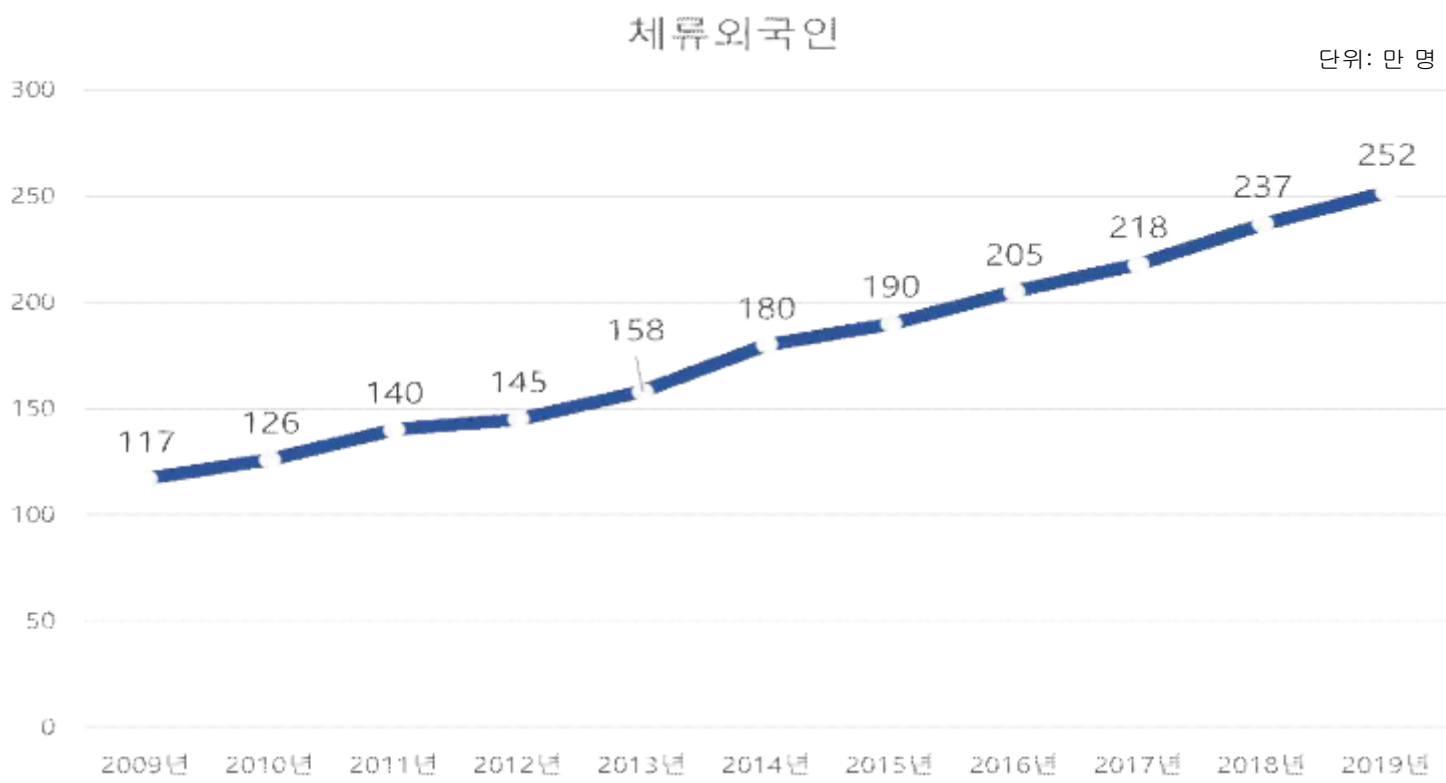
본 연구는 법무부의 2020년 용역보고서를 학술적으로 발전시킨 결과물임

Part 01. 배경: 이민행정 추진체계의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

Ⅰ. 배경: 이민행정 추진체계를 둘러싼 이슈

- 우리나라의 이민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아직까지 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이민행정조직의 마련 및 운영이 미흡한 실정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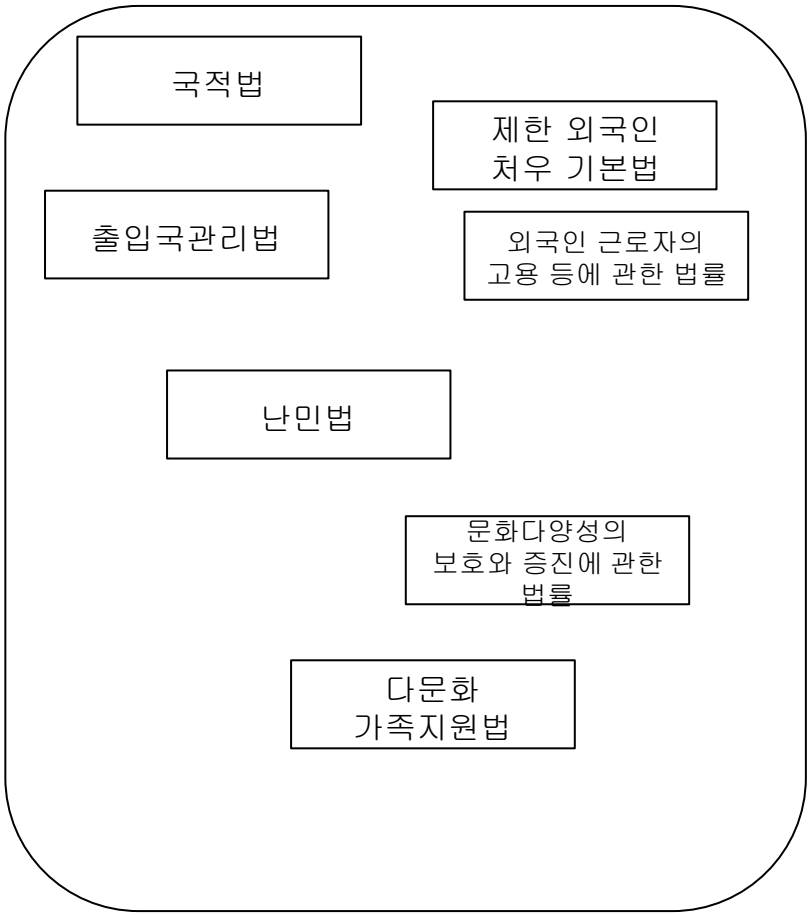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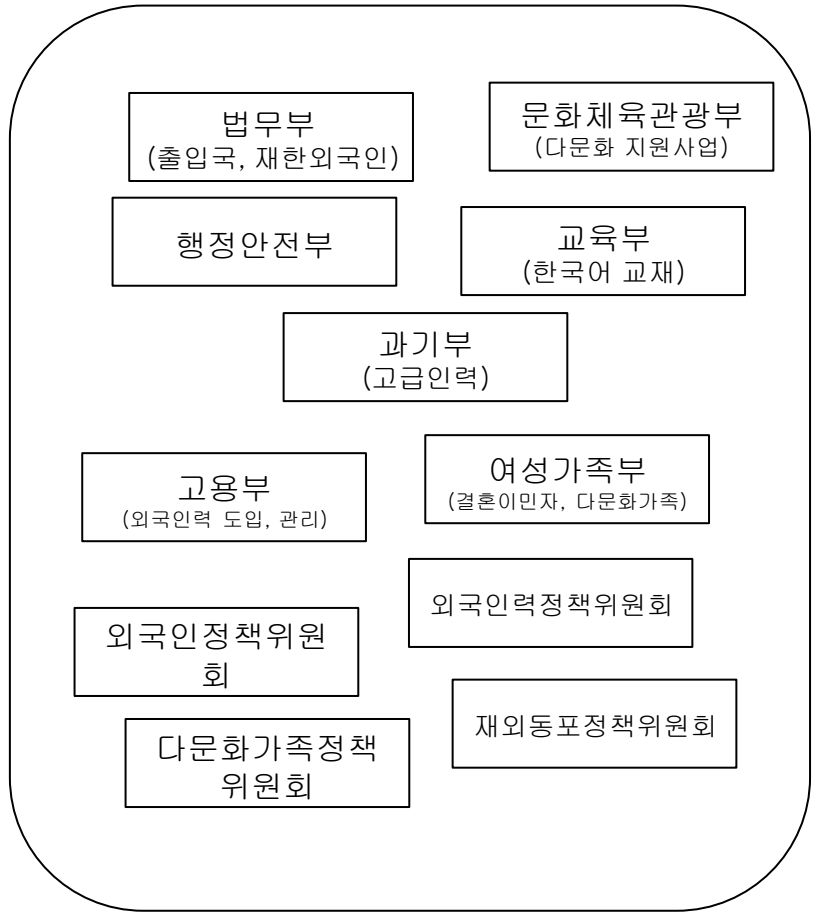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19)

Ⅰ. 배경: 이민행정 추진체계를 둘러싼 이슈

-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민행정은 다수의 행정기관(중앙부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리되어 있음. 이민행정 업무가 분산되어 업무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민행정과 관련된 통합 목표를 수립,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변화 되고 있는 이민행정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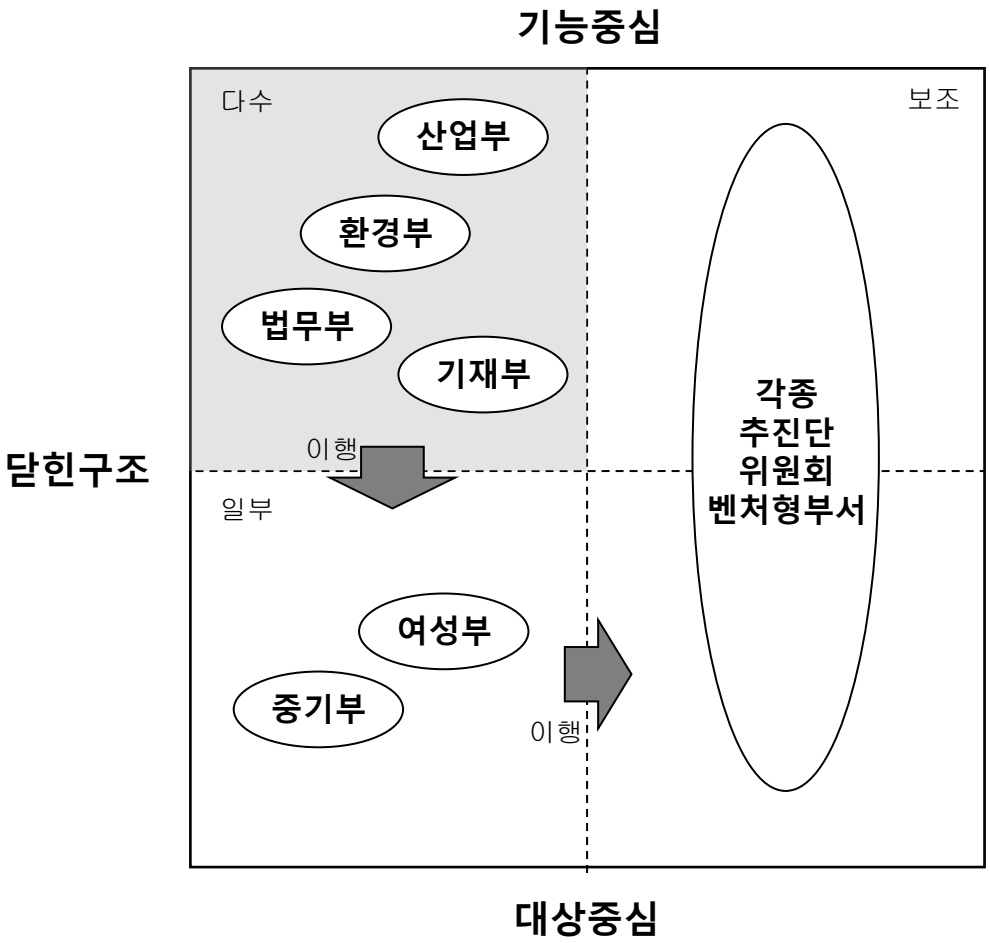
Ⅰ. 배경: 이민행정 추진체계를 둘러싼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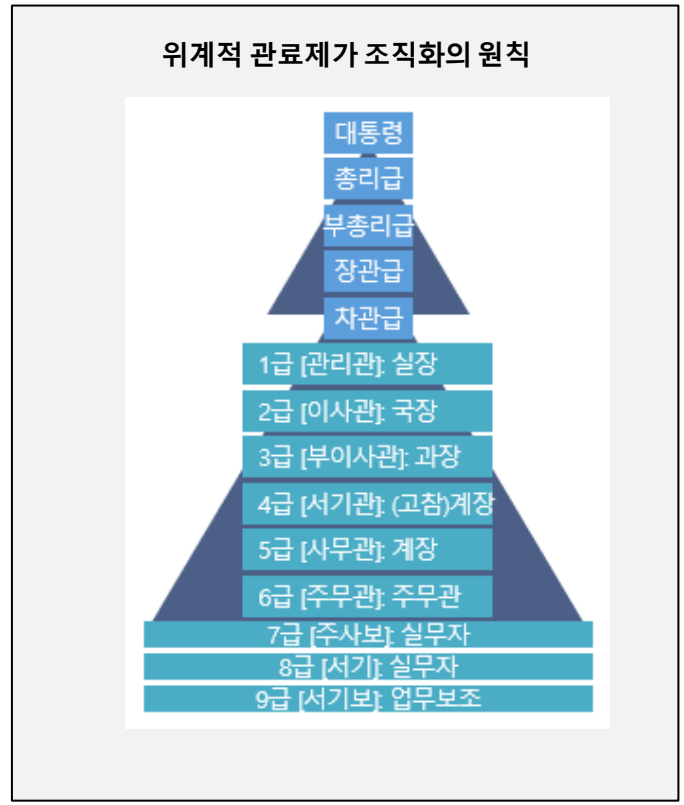
- 조직이론(유형론)의 관점에서 한국 이민행정 추진체계를 진단하고, 향후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
-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인접한 국가들의 추진체계 사례(예. 일본, 싱가포르, 중국, 대만) 검토를 통해 함의를 도출

Part 02. 이론: 조직구조의 유형 및 한국 정부조직의 문제

II. 이론: 조직구조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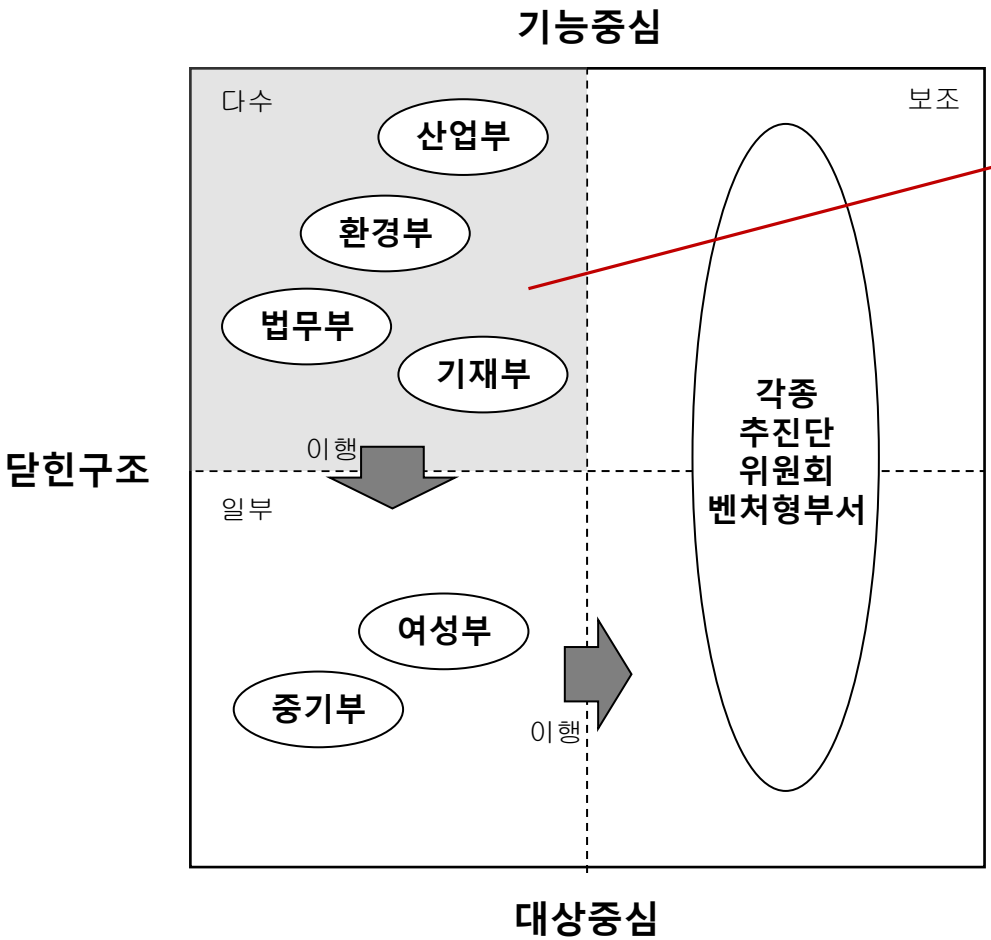
- 정부조직은 (1) 기능-대상중심, (2) 닫힌-열린구조의 두 가지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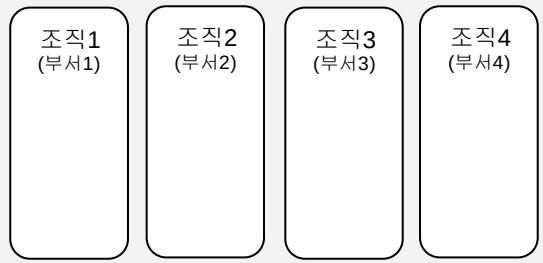


II. 이론: 조직구조의 유형

- 기존 기능중심 관료제 정부조직은 조직 간 (부서 간) 교류 보다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일로 효과'(silo effect)를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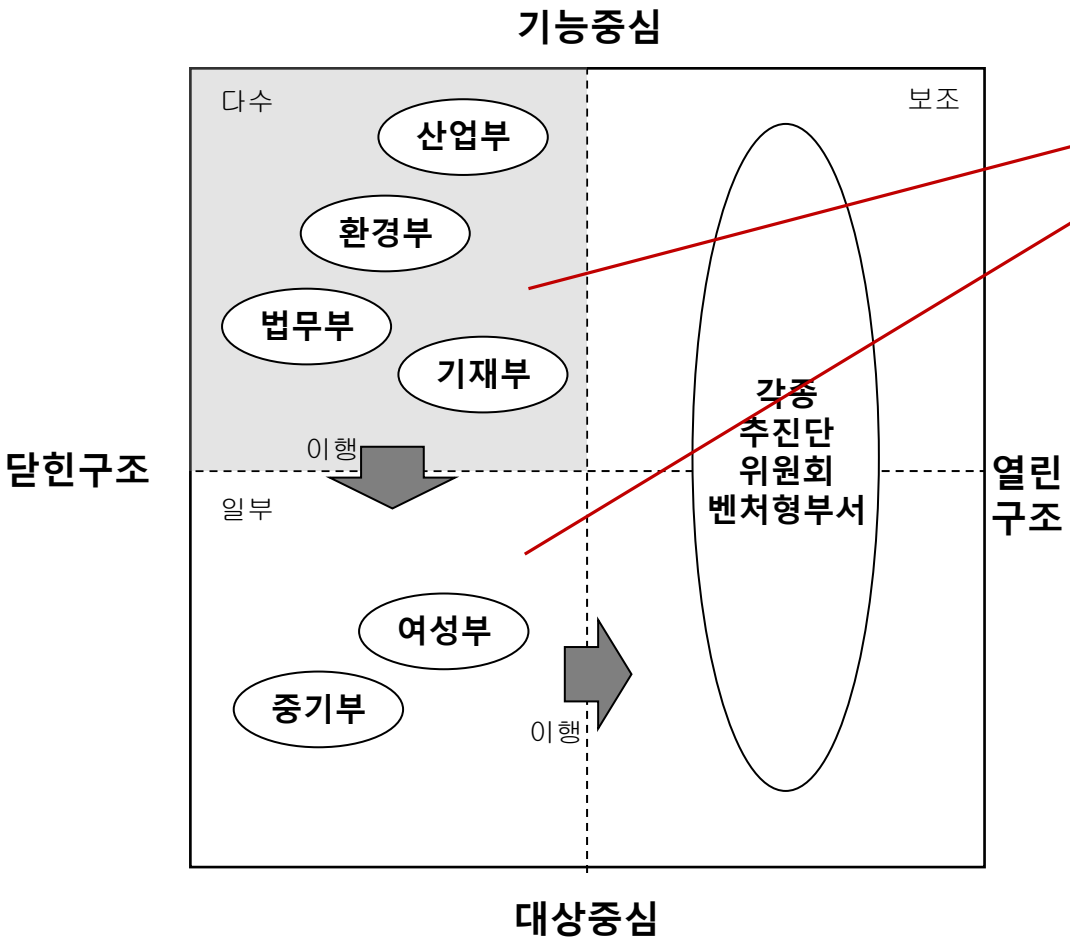
이슈: 사일로 효과(Silo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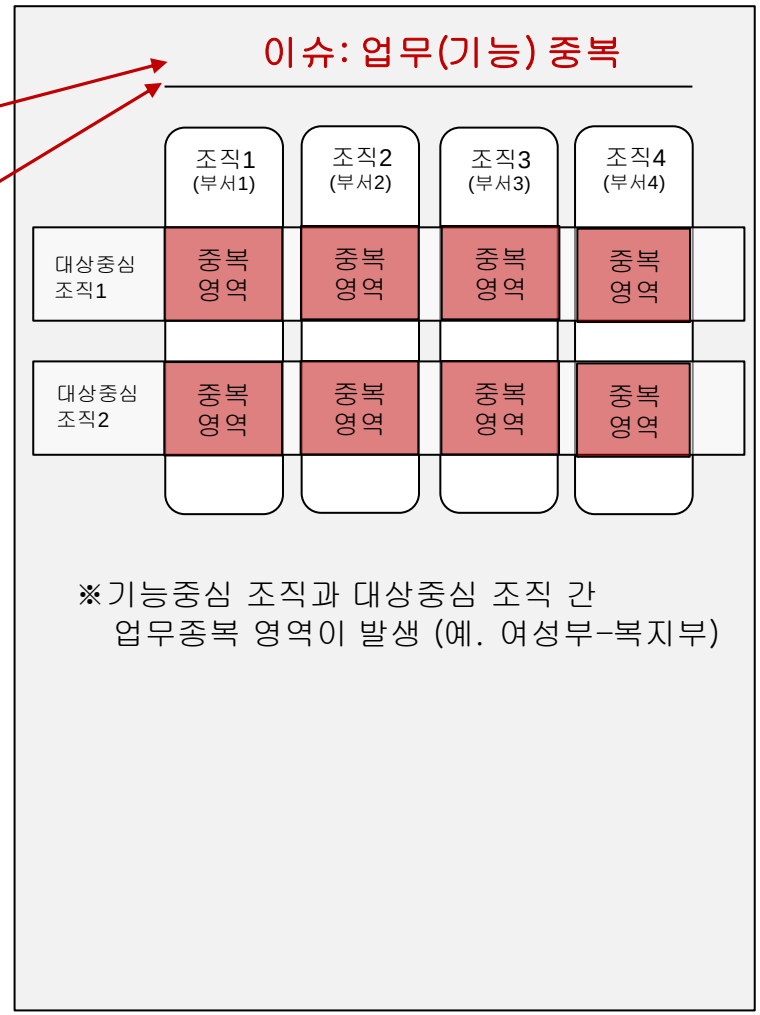


※이민행정의 경우, 기능 간 분절성 이슈의 원

II. 이론: 조직구조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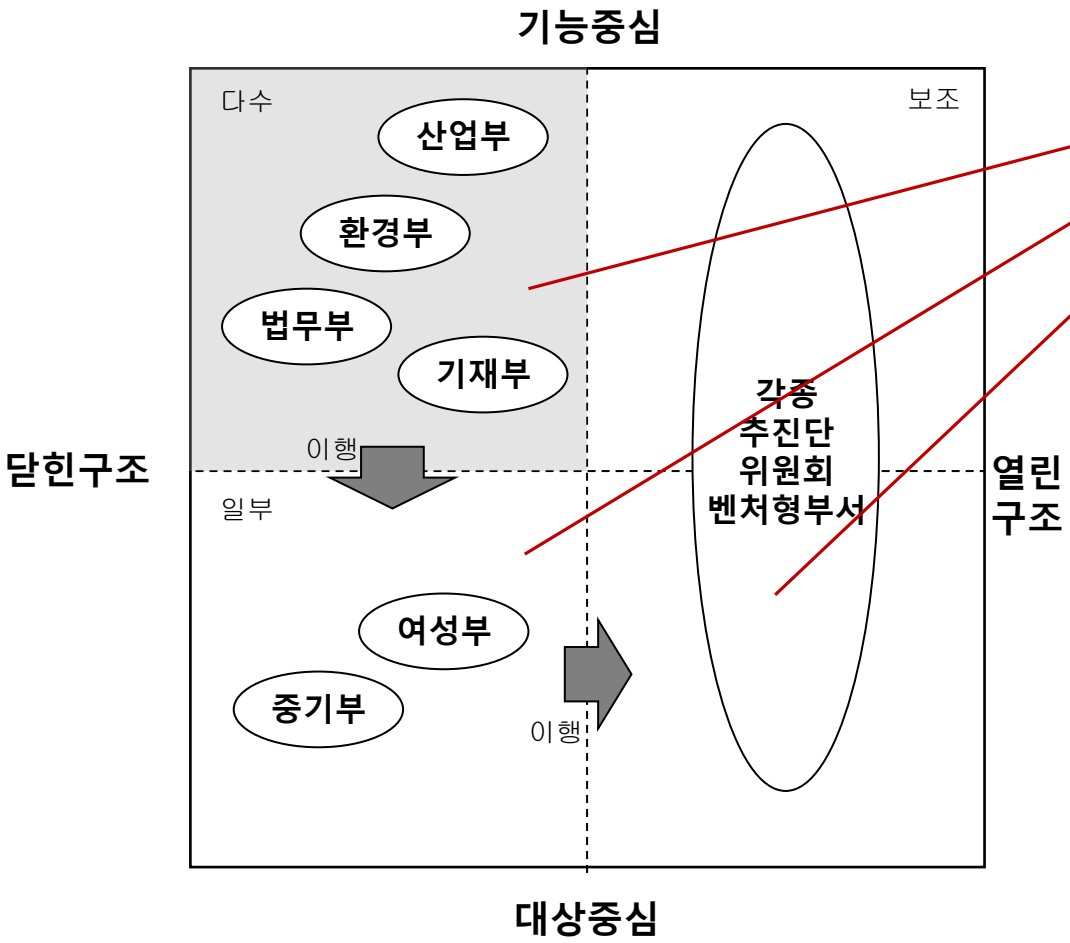
- 기능중심+대상중심 조직의 혼재는 업무(기능) 중복의 문제를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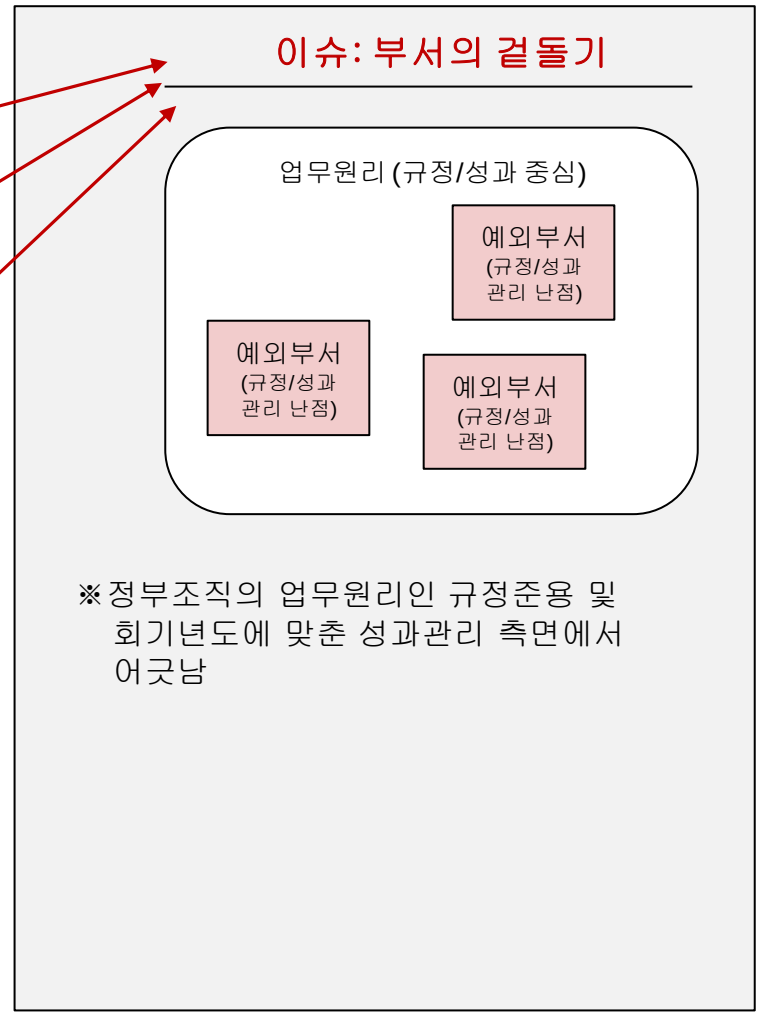




II. 이론: 조직구조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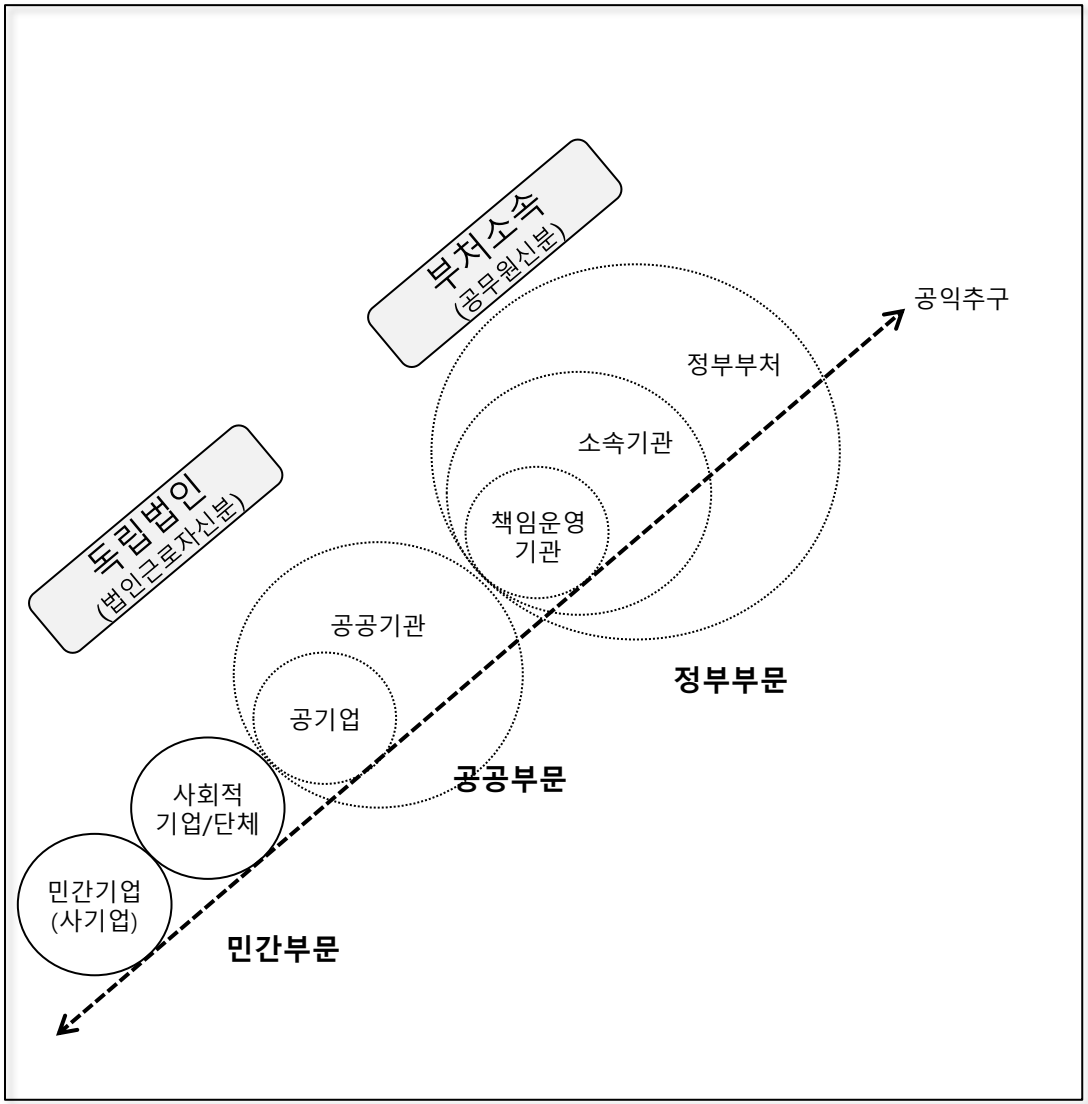
- 기능중심+대상중심 조직의 혼재는 업무(기능) 중복의 문제를 야기





II. 이론: 조직구조의 유형

- 한국의 정부부문 및 공공부문 조직들은 앞선 세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상태에 있음



부문	조직	구분	정의
정부부문	정부부처		· 독점적인 정부서비스 주체 (공익과 공공재 추구)
	소속기관		· 행정부처에 부속하여 부처를 지원하는 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 소속기관 중에서 사업 특성상 전문성의 필요가 높아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관리를 통해 책임을 되묻도록 한 기관
공공부문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 주된 업무가 공공재 제공 등 공공성에 있으나 정부재원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 주된 업무가 공공재 제공 등 공공성에 있으나 인력과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기관
		공기업	· 주된 업무가 사업을 통해 수익사업인 공공기관 (총수입액의 ½가 자체수입)
민간부문	사회적 단체	비영리단체	· 수익보다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적활동을 지향하는 사회적 미션을 지닌 조직
		사회적 기업	·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적활동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수익을 발생하는 기업
	민간기업	영리기업	·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하나, 공공성의 관점에서 CSR, CSV 활동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지점이 있음

Part 03. 진단: 이민행정 체계 진단 (재외동포 정책의 사례)

III. 진단: 한국의 정책체계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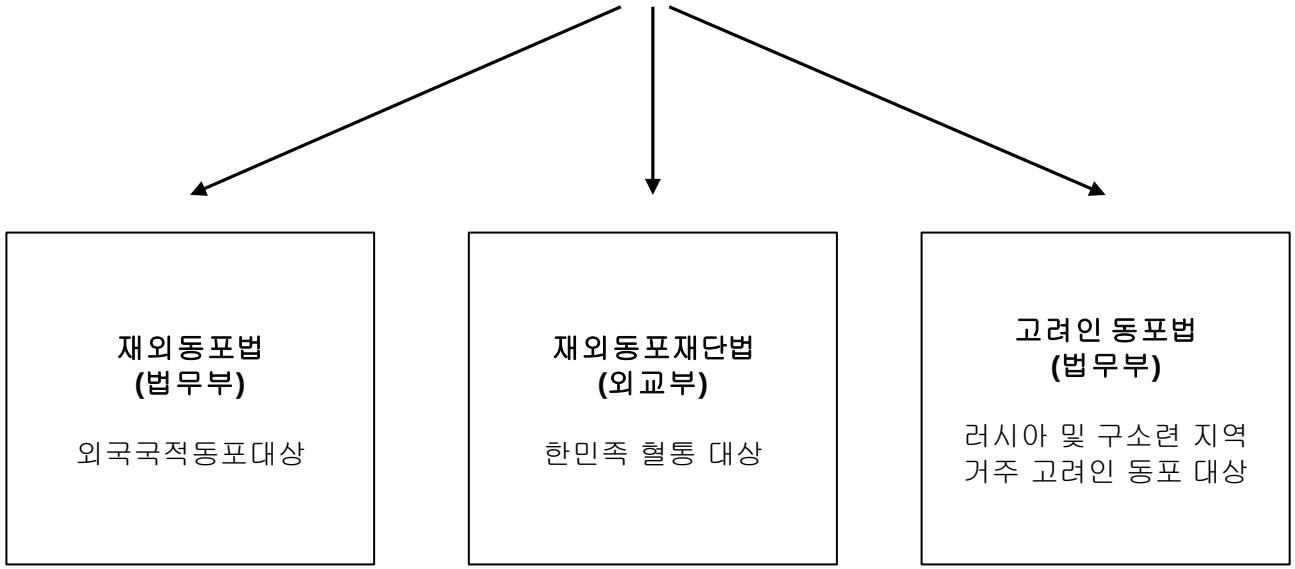
- 한국의 정부조직은 법적근거(근거법)을 바탕으로 구성 및 운영. 그리고 법적근거는 대상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필요로 함. 그러나 각 정책의 영역에서 개념적 유형화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찾기 어려움

예시: 한국인의 개념적 유형화: 국적과 민족으로 구분

국적	한국인(한국국적자)			외국인
민족	비한민족계 한국인	한민족(혈통보유자)		
성격	귀화인	태생적 한국인	재외국민	한국계 외국인
거주	국내		국외(재외동포법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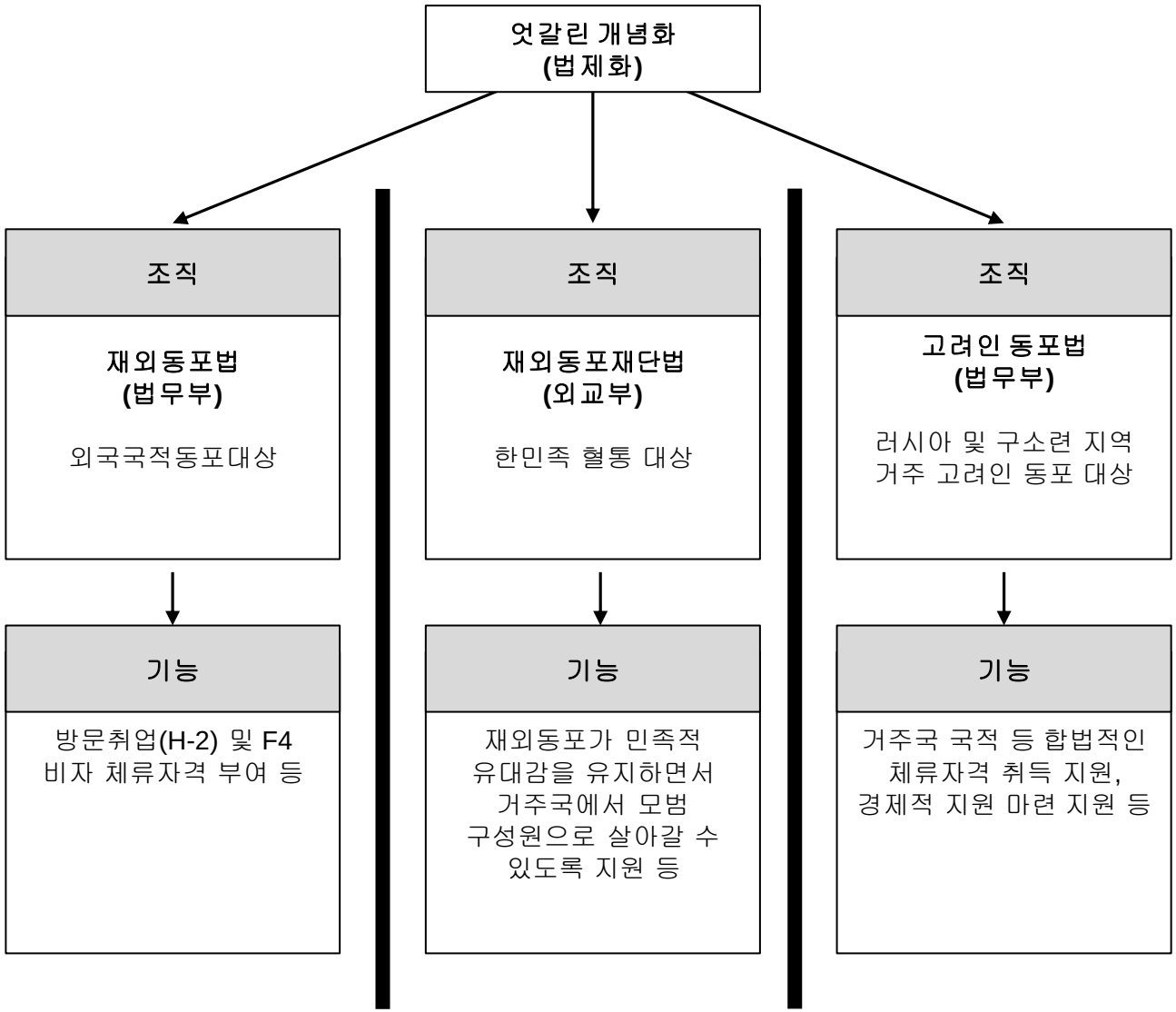
출처: 전재호(2008:104)

- 재외동포 개념의 경우: (1) 민족과 같은 혈통주의의 입장, (2) 국적을 같이하는 국민의 입장, (3) 종교나 정신을 같이하는 문화공동체의 입장 (예. 유태인) 등에 대한 학계-실무의 개념화가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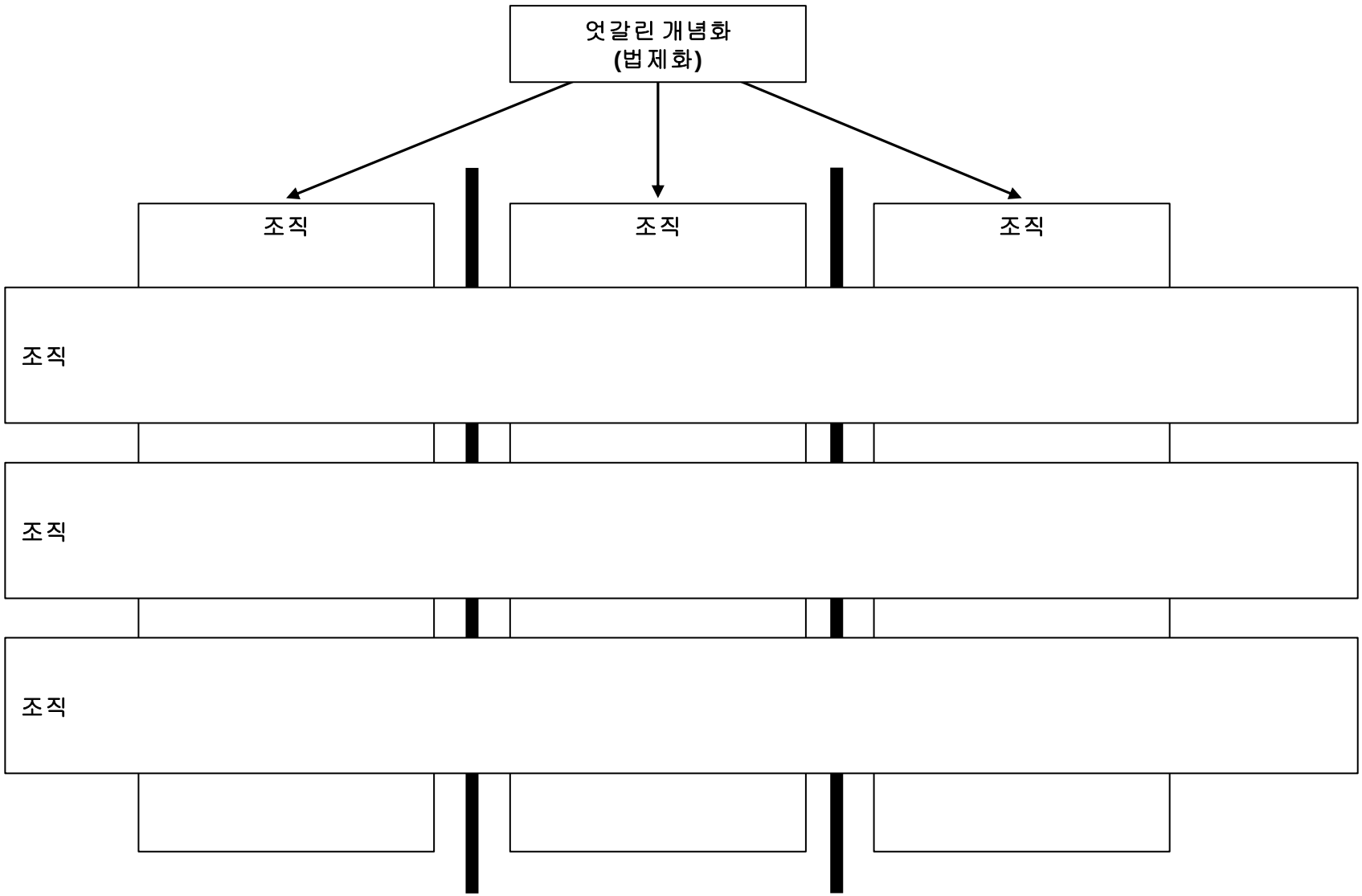
III. 진단: 한국의 정책체계 진단

- 서로 엇갈린 법 근거에서 비롯한 서로 엇갈린 정부조직으로 인하여 '사일로 효과'(silo effect)가 부각



III. 진단: 한국의 정책체계 진단

- 정책추진체계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음



Part 04. 제안: 보다 체계화된 정책체계를 위한 고민

Ⅳ. 제안: 한국의 정책체계 진단

- 주변국들의 이민정책 체계 개편 방향성은 공통적으로 법무부 등 주무부처를 설정하고, 전담기구를 설립 및 정비하여 분절성과 중복성을 완화하는 데에 있음 → 참조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함

	정책기조(방향성)	전담기관	기구특성	설립목적
일본	저출산, 저성장 극복을 위한 숙련외국인 수용정책	출입국재류관리청	법무부 산하의 외청	부처 간 기능중복 해소 및 상담창구단일화(원스톱서비스 제공)
싱가포르	소규모 국가의 인적자원 한계 극복을 위한 숙련외국인 수용정책	이민 및 체크포인트 담당국	내무부 산하의 외청 (대부처주의)	사무부담의 증가에 따른 전담기관의 필요성 대두
대만	저출산 극복 및 국경관리(난민) 관리기능의 강화	이민서	내정부 산하의 외청	정책기획 기능과 이민관리기능 강화의 필요성 대두
중국	개혁과 개방에 따른 관리기능의 강화	국가이민관리국	차관급의 청단위 독립기구 (대부제)	유사기구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 제고

- 각국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과 개혁의 일환으로 이민정책 수요 증대
- 과거 출입국 업무나 국경관리 기능에서 확장하여, 정책기획, 국가인적자원관리, 외교(난민) 업무를 포괄
- **별도의 전담기관 설립의 패턴: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법무부 산하의 외청), 싱가포르의 '이민 및 체크포인트 담당국'(내무부 산하의 외청), 대만의 '이민서'(내정부 산하의 외청), 중국의 '국가이민관리국'(차관급 청 단위)**

IV. 제안: 한국의 정책체계 진단

- 해외사례를 통해 본 체계 개선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법무부 등 주무부처 내부의 부서를 외부로 빼내 외청화 하는 방식. 이는 책임운영기관(소속기관)화 등 다양한 방식의 기관화(agencification)를 통해 부처의 감독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접근방법임.
    (※ 검토한 사례들은 대부분 이러한 외청화 방식을 방법론으로 삼고 있었음.)

  - 둘째, 이민정책 관련 유관조직들이 각자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일정부분 유지하되, 조직 간 사업의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처 간 협의 목적의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방식. 이는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여 잠재적인 저항과 변화비용을 줄이되, 느슨한 협업을 강조하는 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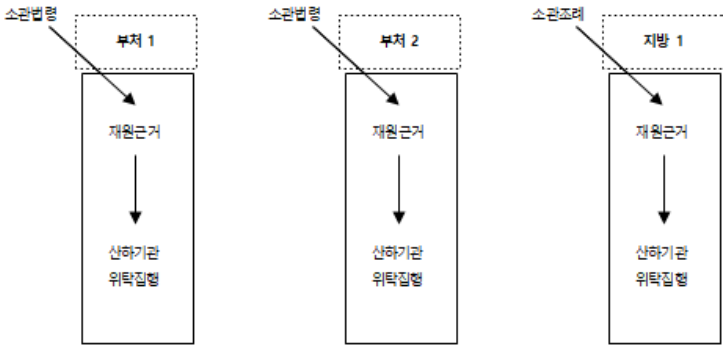
  - 셋째, 별도의 독립기관을 신설하고, 다른 부처들의 권한과 기능을 이관하는 방식임. 신설된 기관은 모(母)부처의 통솔범위로부터 자유로움.

  - 넷째, 다부처의 유관 부서들을 통폐합하고,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분사하는 방식임. 이는 중국의 '국가이민관리국'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접근 방식으로 가장 강력한 통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IV. 제안: 한국의 정책체계 진단

- 사일로(silo) 방식의 체계를 연계가 강화된 매트릭스(matrix) 방식으로 재편

사일로 방식의 조직체계



매트릭스 방식의 조직체계

- 우리나라 이민행정은 살펴본 국가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행정기관(중앙부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민행정 업무에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음

- 사일로 방식의 이민행정 체계는 사업 간의 연계성을 약화시키고, 협업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며, 국가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기획기능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또한 사업역량의 분절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같은 문제를 내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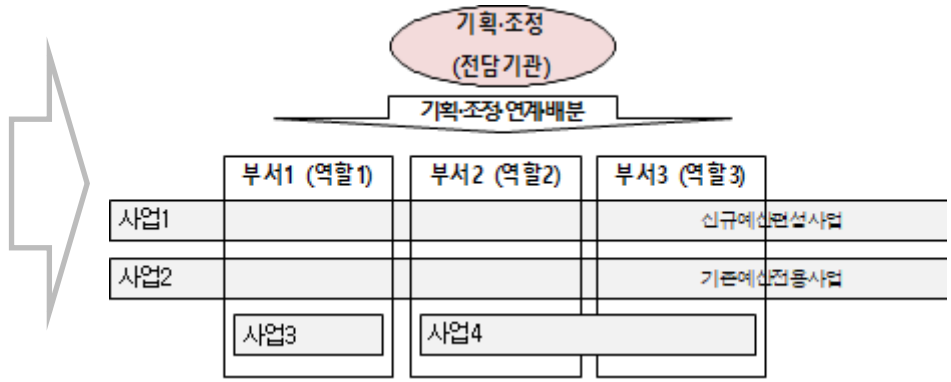
- 사일로 방식의 이민행정 체계는 또한 정책대상(혹은 정책고객)으로 하여금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탐색을 위하여 서로 다른 조직들에 대면해야 하는 불편을 비용으로 야기하게 됨. 이러한 비용으로서의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구를 단일화 하거나,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플랫폼을 단일화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 (예. 일본)

IV. 제안: 한국의 정책체계 진단

- 기획과 조정 기능이 강화된 매트릭스 방식화를 방향성으로 제안함

매트릭스 방식의 조직체계

기획, 조정 기능이 강화된 매트릭스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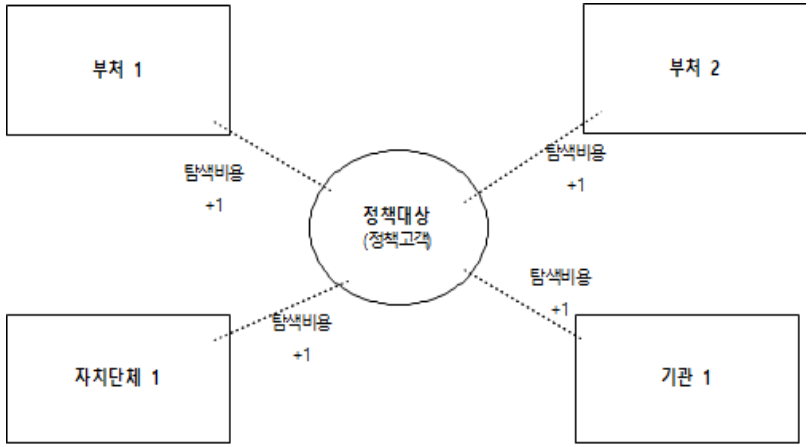
- 변형된 매트릭스 방식은 '전담기관'이 기획과 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유관된 조직들의 협업구조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전담기관 주도적 매트릭스'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변형된 매트릭스 방식은 싱가포르나 일본의 사례에서 실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중국 수준의 강력한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가장 개연성과 실행가능성이 높은 운영방식이라고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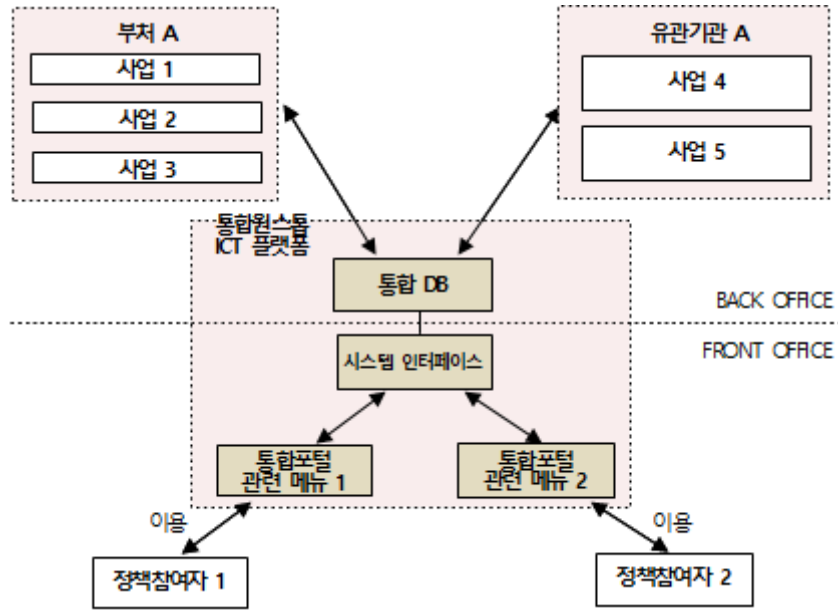
IV. 제안: 한국의 정책체계 진단

- 분절된 행정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일원화 된 플랫폼으로 재편함

분절된 행정체계



일원화 된 플랫폼



- '정책당사자(혹은 정책대상)의 여정 관점'에서 지금의 분절된 정책체계를 일원화 혹은 원스톱화 할 필요성이 제안됨.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각 조직들로 분절된 업무영역들을 통합된 디지털 데이터 기반을 바탕으로 묶어 관리할 필요성을 들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

이민정책의 발전과 도전: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평가와 과제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지속가능한 한국이민정책의 모색: 제3차 외국인정책의 성찰과 제4차 외국인정책의 방향’
2021. 6. 2.(수) 13:25~14:30. 실시간 온라인 회의(Webex)

목차

1. 발전국가의 이민정책 기획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평가
3.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

1. 발전국가의 이민정책 기획

-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정부가 발전을 지배 이데올로기이자 최우선의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이 부분에 집중 배분하는 국가 형태"(문정인, 2014)

✓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행위자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고, 필요하면 시장과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동원하는 기능까지도 행사"

- Chalmers A. Johnson.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 Alice H. Amsden.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Meredith Woo-Cumings (ed.). 1999. *The Developmental State*. Cornell University Press.
- Stephan Haggard. 2018. *Developmental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전국가 모델

● 네 가지 핵심 요소
① 발전지향적 국가 관료 엘리트
② 국가 관료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
③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④ 발전 전략을 주도하는 선도기관(pilot agency)
→ 197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래 한국정부 정책의 특성: 거의 모든 영역

※ 발전국가 모델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평가

- 유효: 정책 개입의 정도와 방식을 달리하여 적용 가능
- 한계: 국가 관료의 우월적 지위, 폐쇄적 사회연결망, 명령형 조직

세 차례의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

① "우수한" 국가 관료 엘리트가 발전지향적 "외국인정책" 기획

- "위로부터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from above)라는 평가도 있음

② 국가 관료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계획, 주무부처(주관부처와 협조부처)/소관부처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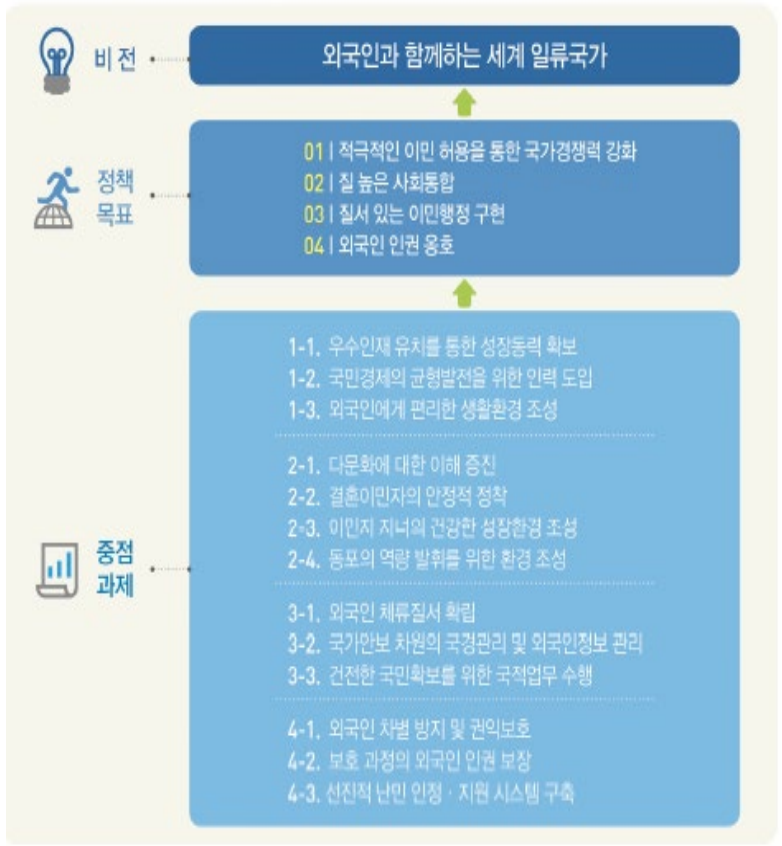
③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 조직/인력과 예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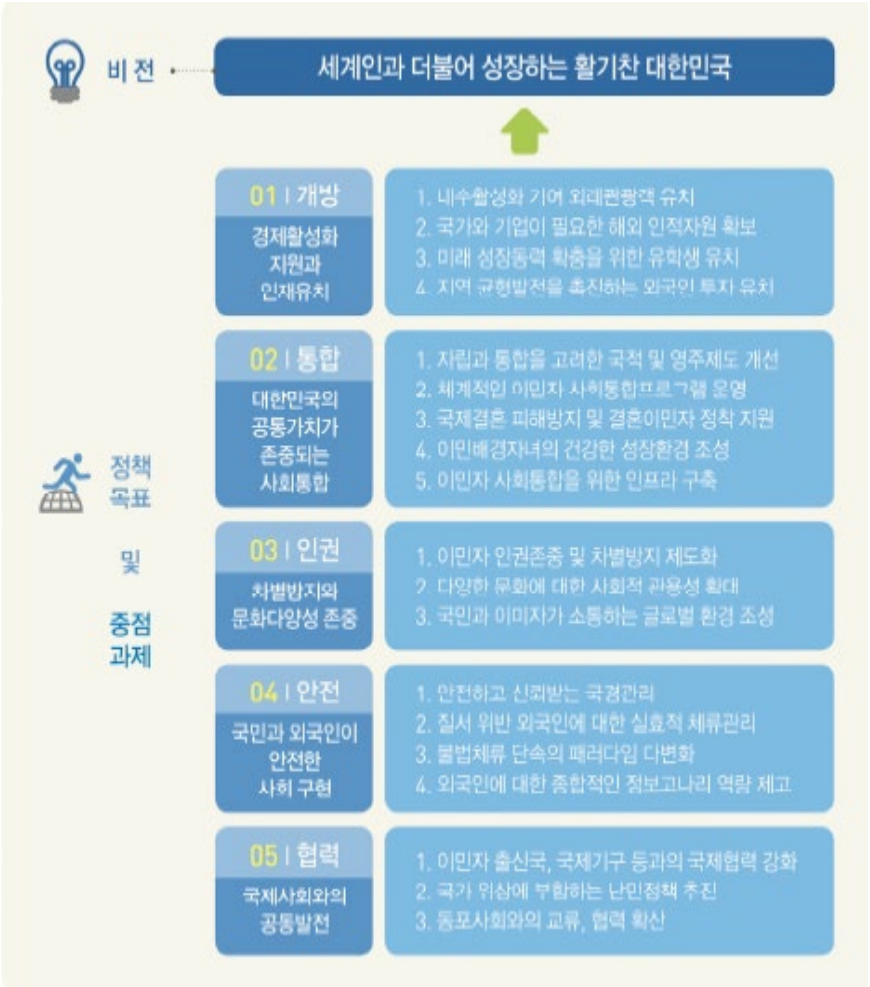
④ '이민정책' 발전 전략을 주도하는 선도기관

- 외국인정책위원회. 그러나 일본의 통상산업성, 한국의 경제기획원에 해당하는 기관 부재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비전과 정책목표

-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제1차)

① 적극적인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② 질 높은 사회통합 ③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④ 외국인 인권 옹호

-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제2차)

①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② 통합: 대한민국의 공통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③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④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⑤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제3차)

①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②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③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④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⑤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2. 기본계획 평가 1: 국가의 발전 지향

- 국가 관료가 주도/선도하여 이민자(외국인과 국적취득자 및 무국적자)를 수용하고 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긴 것은 매우 훌륭한 성과를 낳음

- 그러나 정확하지 못한 정책개념의 문제

✓ '이민정책'을 표방하지 못하고 "외국인정책" 개념 사용

"세계 각국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민정책'이라는 보편적 개념 대신에 '외국인정책(법무부)', '외국인주민정책(행정안전부)', '외국인력정책(고용노동부)' 또는 '다문화가족정책(여성가족부)', '다문화교육정책(교육부)', '다문화장병정책(국방부)' 등 특수한 개념 사용."

✓ '외국인주민'(행정안전부)이라는 개념이 국민을 포함

✓ '한국인의 국제결혼가족'만 '다문화가족'이라 지칭

평가 2: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

- 한국의 외국인○○정책·다문화○○정책은 단시간에 큰 성과

- 그러나 정책추진체계의 문제 발생

✓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바람에 정책의 중첩·비효율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정책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 조직 간 칸막이 현상(sectionalism in organizations) 또는 조직 사일로 효과(organizational silos effects)

✓ 전 정부적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 필요: 소관부처들 간의 유기적 분업/조정이 필수 → 외국인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한계에 봉착

✓ 여러 개의 개별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이민 관련 법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이민법 필요

평가 3: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 조직, 인력, 예산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을 통해 큰 성과 달성

-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두드러짐

- 조직: 외국인주민(이주민)정책 vs. 가족정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인력: 소수 증원
- 예산: 부분 확대, 그러나 다양한 재원(이민자 사회통합기금 등) 확충에는 실패

평가 4: 이민정책 발전을 주도하는 기관

- ‘이민정책’ 발전 전략을 주도하는 선도기관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 한계 노출. 각 부처의 성과는 좋지만, 그것을 총괄하며 정책을 조정하는 수준에는 못 미침

-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 설치 필요 → 국적·이민처(MONIS: Ministry of Naturalization and Immigration Service)

✓ 이민 수용에 소극적이었던 일본도 2019년 법무성 입국관리국(法務省 入国管理局)을 확대 개편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설치

※ 설동훈 (2017) “한국의 이민자 수용과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문화와 정치≫ 4(3): 85-122; 설동훈 (2018) “2018년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혁: 분석과 평가.” ≪의정연구≫ 24(3): 123-152; 설동훈·오학수·고재훈 (2019) 『일본의 특정기능 체류자격 도입이 갖는 외국인력 정책 시사점과 과제』. 고용노동부.

3.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 1: 현재 문제 극복

- 기존 기본계획의 문제점 극복

✓ 이민정책 발전 방향 확립: 외국인정책→ 이민정책

✓ 이민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 통합이민법

✓ 이민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이민자 사회통합 기금 설치(이민자 통합 사업 재원 확충/다변화) 등

✓ 이민정책의 선도기관: 국적·이민처(MONIS: Ministry of Naturalization and Immigration Service) 설치

새로운 방향 2: 이민정책 환경 변화 반영

- 인구고령화, 코로나19, 초연결사회 등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이민정책 수립
- 돌봄 노동력 수요 증대
- 건설업, 조선업 등 '지리적으로 고정된 산업'(geographically fixed industry)의 인력 수요
- 노동시장이 ① 원격 근무가 가능한 전문직종사자(the Remotes), ②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인력(the Essentials), ③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the Unpaid), ④ 반강제적으로 무급휴가를 가거나 해고당해 잊혀진 사람들(the Forgotten)로 재편되는 추세 고려(Reich, 2020)

→ 외국인 우수인재의 재 규정, 충원 방법 혁신

→ 정주형 이민과 교체순환형 이민을 구분하여 체계적 정책 마련

※ 이민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

● 사회적 환경 변화

① 인구고령화, 극도로 낮은 출산율, '출산력보다 사망력이 큰 사회' 도래 → 머지 않아 절대적 인구감소로 '인구 보너스' 시대의 종말, '인구 오너스' 시대 진입

② 코로나19의 효과: 이주의 형태/규모 변화 → Telemigration 원격이주: 국경을 넘지 않고서 해외취업자처럼 살 수 있다.

- Alex Aleinikoff (2020) "The Fragility of the Global Mobility Regime: What states could not do on their own, the virus has completed."
- Richard Baldwin (2019) "Telemigrants are coming for your white-collar job, and a wall won't stop them."
- Robert Reich (2020) "Covid-19 pandemic shines a light on a new kind of class divide and its inequalities." *The Guardian*, 26 April 2020.

③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 즉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의 등장

새로운 방향 3: 우수 인재 유치/정착 모델

-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정착 모델: 국가, 시장, 사회 모두의 노력

✓ 이주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나라(자녀 교육 포함)

✓ 이주민이 일하고 싶은 나라

✓ 이주민이 정착하고 싶은 사회

→ 선진경제에 걸맞은 문화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각국의 인재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모델

새로운 방향 4: 시민참여형 정책 모델

- 시민참여형 정책 모델 개발: 내국인과 이민자 모두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시민. 즉, 주민이 시민이 되는 사회가 전개될 것이므로, 국가 주도로만 이민정책을 수행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간문화주의/통합(interculturalism / 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구분배제(differential exclusion) 등 다양한 이주민 편입 모형을 대상별로 적절히 구사하되, 일방적 국가 주도가 아니라 시민참여형으로 정책 운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통합기금의 도입을 위한 쟁점과 방향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목 차

1. 무엇을 발표하려고 하는가?

2. 외국은 이민통합기금을 가지고 있는가?

3. 왜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4.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5. 이민통합기능을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1. 무엇을 발표하려고 하는가?

-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019년 12월 252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21년 2월 현재 201만 명 수준
- 체류외국인의 수는 2007년 100만 명, 2016년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체류외국인의 규모 역시 작지 않은 규모
  - 17개 시도 중 200만 명이 넘지 않는 곳이 광주광역시(144만 명), 대전광역시(146만 명), 울산광역시(113만 명), 강원도(154만 명), 충청북도(160만 명), 전라북도(180만 명), 전라남도(184만 명), 세종특별자치시(36만 명), 제주특별자치도(67만 명) 등 9개
- 체류외국인의 증가는 우리나라 사회에 몇 가지의 과제를 제시
  -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우리나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 필요
  - 국민을 위한 재정수요 창출과 해소방안 논의 필요
  - 국민들의 반감과 해소방안 논의 필요 등
- 우리나라는 체류외국인과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나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문제 발생
  - 서비스 수혜대상의 편중현상
  - 다수 기관들의 유사 중복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 문제 발생
  -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특별지원한다는 인식과 함께 국민의 반정서적 기류 형성 등
- 본 연구는 체류외국인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던져 준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이민통합 기금의 설치, 관리 운용 등에 대해 논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

2. 외국은 이민통합기금을 가지고 있는가?

구분	명칭	주요내용
뉴질랜드	이민 부담금	• 이민법 제399조에 의해 이민자에게 부담금 310달러(23만원)을 부과, 이민자 영어 교육, 취업지원 서비스, 이민관련 연구용역 등 이민자 사회통합 비용에 활용
캐 나 다	이민자정착 수수료	• 체류허가 신청 시 추가로 이민자 정착수수료 490달러(50만원)를 이민자에게 부과(사회정착비용으로 활용) ❖ 캐나다는 별도의 외국인사회통합 예산을 운영하며, 주별 이민자 비율에 따라 정착 예산을 배분
영 국	이민조정기금	• 일반세입예산에서 이민자 일반지원금 연간 3,500만파운드(523억원), 긴급지원금 4,000만파운드(598억원) 조성(이민자 관련 사업 및 불법이민 대처 등 비용으로 사용)
미 국	이민심사수수료계정	• 이민국적국(USCIS)에서 영주권 신청, 갱신 수수료 수입 등을 행정비용으로 활용
호 주	이민자 구직기금	• '13. 7월부터 호주 이민자의 실업률을 줄이고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660만 달러(63억3천만 원)의 구직기금 조성
유 럽	제3국 국민통합을 위한 기금	• 자국 거주 제3국 국민의 유럽 사회로의 통합을 위해 언어, 제도, 문화, 기초법질서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EU는 기금을 회원국별 제3국 출신 합법체류자 수에 비례해 분배

3. 왜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장래 사회갈등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
  - ✓ 외국인 사회통합 실패로 인해 외국인의 저소득층 전락,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와 일탈행위 증가, 국민의 반외국인 정서 확산 등 문제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 사회갈등해소: 이민자의 사회통합실패는 2세의 성장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갈등으로 발전
  - ✓ 사각지대 지원: 혼인단절자, 중도입국청소년 등 국가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대응
- **국민부담해소 및 성장동력 확충기반 마련**
  - ✓ 세금부담해소: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 해소
  - ✓ 성장동력확충기반 마련: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비한 외국 우수인재 유치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출산율 저하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에 따라 외국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 준비 필요
- **유사 중복 프로그램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 문제 해소**
  - ➢ 중앙부처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사 중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집행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 이민통합기금의 신설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조정

4.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 기금의 신설을 위한 법적 요건: 국가재정법

✓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 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제14조 2항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설치 가능. 여기에서는 5를 제외한 나머지 가능성을 검토

4.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 수익자부담원칙 충족 여부

- 수익자부담원칙은 공공시설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들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
  - ✓ 수익자부담금으로 당해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의 실시로 인한 예외적, 우발적 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보유

- 이민통합기금을 설계할 때 수익자부담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상 필요
  - ✓ 세입 예시
    - 출입국업무 및 국적업무 관련 수수료, 전자민원 수수료 및 등록증발급 비용, 범칙금 및 과태료 등으로부터 충당
  - ✓ 세출 예시
    - 외국인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

-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민통합기금을 설계한다면 수익자부담원칙 충족

4.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나. 사업의 특성 상 신축적인 사업추진 필요 요건 충족 여부

-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적기에 재원을 투입하려면 별도의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 필요
  - ✓ 기금은 예산 단년도 원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기여
  - ✓ 즉,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기 지출 등 재정수요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장래에 발생 할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기금 설치 필요

- 외국인정책의 경우 체류외국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여야 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원투입 필요
  - ✓ 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한 재난상황 발생 시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재한 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방역 물품(마스크 등) 및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하여 탄력적 대처 가능
    - 금번 코로나 사태 시 논란이 되었던 외국인 공적마스크와 재난지원금 대상 · 범위 문제에 대해서도 이민 · 통합기금이 설치되면 국민의 공감을 확보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

4.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 기금 조성규모
  - ✓ 2020년 기준 약 1,109억 원
    - 체류업무 및 국적업무 관련 수수료 : 642억 원
    - 전자민원 수수료 및 등록증발급 비용 : 152억 원
    - 범칙금 및 과태료 : 315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억원)	1,045	1,099	1,153	1,325	1,173

4.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다.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 가능성의 요건 충족 여부

- **재원이 안정적 (충분성 요건 포함)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 재원의 안정성과 충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규모의 파악 필요

- **세입규모**
  - ✓ 출입국업무 및 국적업무 관련 수수료, 전자민원 수수료 및 등록증발급 비용,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규모를 파악하여 활용

- **세출규모**

✓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연도별 투자계획의 규모를 활용

❖ **세입과 세출을 고려할 때 세입규모가 세출규모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대책 마련 필요**

4.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1,413.14	2,335.54	2,317.34	2,261.01	2,285.64	1,031.94
국비	일반회계	6,631.07	1,482.06	1,395,48	1,281.77	1,290.09	1,181,67
	특별회계	89.03	31.00	10.00	28.03	10.00	10.00
	기 금	4,131.47	698.52	802.48	841.83	876.14	912.50
	소 계	10,851.57	2,211.58	2,207.96	2,151,63	2,176.23	922.50
지방비		561.57	123.96	109.38	109.38	109.41	109.44
기타 (민자 등)		-	-	-	-	-	-

추진분야별	개 방	8,113.07	1645.77	1584.57	1590.31	1629.11	1663.31
	통 합	1,117.15	196.33	255.37	214.75	221.32	229.39
	안 전	1,032.80	177.50	325.20	277.10	111.00	142.00
	인 권	636.11	113.88	121.25	129.70	130.31	140.97
	협 력	514.00	202.06	30.95	49.15	193.90	37.94

4.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 일반회계, 기존 특별회계가 아닌 새로운 기금 신설의 타당성 요건 충족 여부

➢ 신축적 재정운영, 불확실한 미래수요의 반영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기금 설치 필요

✓ 해외의 사례

- 뉴질랜드의 이민부담금제도
- 대만의 취업안정기금
- 유럽연합의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제3국 국민통합을 위한 유럽기금, 유럽난민기금) 등

❖ 새로운 기금의 신설로 미래수요 등에 반영 필요

5. 이민통합기금,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가. 개요

- 명칭,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운영체계, 입법 방식 등과 관련된 내용 논의 필요

나. 이민통합기금의 설계

(1) 기금의 명칭: '이민통합기금(이민자 기여 사회발전기금)' 이라는 명칭의 적정성

- 적정성 판단기준: 우리나라 기금 명칭 분석
  - ✓ 국가재정법 별표 3: 금융성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가장학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 ✓ 국가재정법 별표 3의 기금명칭을 보면 목표지향성 보유
  - ✓ 이민통합기금에서는 목표를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사회통합기금 등의 명칭 고려 필요

5. 이민통합기금,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2) 기금의 조성

- 원칙: 수익자부담원칙 고려

- 기금의 재원

  1.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2. 「출입국관리법」 제87조에 따른 수수료. 다만, 재외공관에 납입하는 수수료는 제외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102조에 따른 범칙금
  4. 「국적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
  5. 제2항에 따른 이민·통합 기여금
  6.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
  7. 기금 운용수익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5. 이민통합기금,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 **조성기금 부족할 경우 추가 재원 확보 방안**

- ✓ **첫째, 현재 타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중 이민통합과 관련된 재원의 통합 운영**
  - **복권기금에서 다문화사업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 고용보험법에 제시어 있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액 등**
  - **이유는 이민통합기금의 신설목적이 단순히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중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낭비요소를 제거하려는데 있다는 점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
- ✓ **둘째, 외국인에게 추가 부담**
  - **외국인 등록 시 수수료 외 별도로 기금 부과하는 대안 고려**
- ✓ **셋째, 수익자부담원칙을 좀 더 확대하여 적용**
  -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일정 규모를 부담시키는 대안**

❖ **기금의 신설목적을 고려하여 결정**

5. 이민통합기금,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3) 기금의 용도

- 재원이 충분하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업에 투입할 수 있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 제한
- 기금의 용도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로 포함된 사업의 지원
  2. 정책연구·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업무수행 지원
  3.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4.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6. 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보서비스원 등 이민정책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출연)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외국인정책(다문화가족지원정책, 근로자지원정책, 교육정책 등 포함)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유사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활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민통합기금에 가능한 한 많은 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대안 고려 필요

5. 이민통합기금,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4) 운영체제

-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을 기능별로 재분류한 후 부처별로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 고려 가능**
  - ✓ **현재와 같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 부여**
  - ✓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기능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주관기관이 되고 여타 기관들은 고용노동부가 총괄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모형**
  - ✓ **이민통합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후 부처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역할을 부여하고 부처에서 총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
  - ✓ **필요할 경우 총괄부처는 타 부처와 업무분담체계 또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기능 수행 가능**

5. 이민통합기금,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5) 입법방식

- **독립법안 제정**
  - ✓ **기금의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보유**
  - ✓ **신규법률 제정의 어려움**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목적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점에서 이민통합기금의 설치 목적과 유사성 보유**

❖ **독립법안보다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정**

참고문헌

- 김정순(2013).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3-17-01
- 김준현(2014).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 전달체계 비교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361-390.
- 라휘문 (2015).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 사회통합기금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9(2): 1-29.
- 라휘문(2019). “이민통합기금에 대한 논의”.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라휘문 외 (2015). “외국인 정책과제의 연계성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GRI논총」. 17(3): 137-159.
- 라휘문 외 (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분석 및 추진방향: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 자치학회보」. 28(1): 1-23.
- 박상원(2007). 수익자부담 원칙의 이해. 「현안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설동훈(2010).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기금제도의 국제비교”. 민족연구, 한국민족연구원 44권
- 전주상(2014). “이민자 통합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외국인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 정명주 외(2014). “외국인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방안 마련”.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분야 보고서.
- 차용호(2014).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 외국인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감사합니다.

제14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2021. 6. 2

인구관점에서 본 이민정책:
인구전략과 숙련기능인력을 중심으로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차

개요 및 현황
이민정책의 변화와 대응
인구구조 & **인구전략**과 이민정책
숙련기능인력과 이민정책
제언

개요 및 현황

논의를 위한 재료-질문(1)

- 인구문제는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 파급효과는 어디까지 인가?
- 인구구조 변화 양태는 우려할 수준인가 그렇지 않은가?
  - 저출산 고령화, 학령인구 및 생산인구 감소, 지속가능성 국가경쟁력 확보
  - 당위인가? 대안으로서의 검토인가?
- 이민정책의 기여, 기능과 역할은 적절한가?
  - 비전과 방향의 적절성, 중장기 로드맵, 기본계획의 성과
- 국가전략으로서의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 고용노동 측면에서 이민정책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 등 활용의 경제학

개요 및 현황

논의를 위한 재료-개요 및 이른 결론

- 글로벌화는 국가간, 지역간 인구이동, 노동이동을 더욱 촉진시키며, 이민자 유입은 대부분 노동수요에 기인(정치적 인도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
- 이민자 유입은 해당국가의 경제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
- 이민국가, 이민에 대해 호의(우호)적인 국가, 규제강화 국가 등 구분 가능
- 숙련수요 기반의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구축: 1) 분야, 인력확보, 비자체계, 선발 및 채용과 매칭, 2) 외국인력 필요분야 발굴 및 수요 파악(수요파악 지표), 3) 부족 리스트 작성 공표(직종별 요구조건, 자격, 경력, 학력 등 명시), 4) 도입필요성 입증 지표 개발, 5) 외국인력 도입허용 분야 결정체계
- 외국인력 노동시장 활성화, 상시고용계약의 경직성 해소, 외국인력 선발권 등

개요 및 현황

외국인 이민자 주요 고용지표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외국인	2018. 5.	1,300.8	929.1	884.3	44.8	371.7	71.4	68.0	4.8
	2019. 5.	**1,322.6**	**913.6**	**863.2**	**50.3**	**409.0**	**69.1**	**65.3**	**5.5**
	전년대비 증감	21.8	-15.5	-21.1	5.5	37.3	-2.3	-2.7	0.7
	증감률	1.7	-1.7	-2.4	12.3	10.0	-	-	-
귀화허가자	2018. 5.	52.3	36.3	34.6	1.7	16.0	69.4	66.2	4.7
	2019. 5.	**48.8**	**33.6**	**31.6**	**2.0**	**15.2**	**68.9**	**64.8**	**6.0**
	전년대비 증감	-3.5	-2.7	-3.0	0.3	-0.8	-0.5	-1.4	1.3
	증감률	-6.7	-7.4	-8.7	17.6	-5.0	-	-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 5.	44,141	28,184	27,064	1,121	15,956	63.9	61.3	4.0
	2019. 5.	44,460	28,468	27,322	1,145	15,992	64.0	61.5	4.0

자료: 법무부 통계청(2019),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요 및 현황

구직기간별 외국인 실업자

- 외국인 실업자수는 1만9천 명(38.2%),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고치
-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84만8천명, 전년대비 1만5천 명 감소

		2019.5	2020.5	(구성비)	전년대비증감	증감률
구직기간	3개월 미만	30.4천명	34.3천명	(49.4%)	3.9천명	12.8%
	3개월~6개월 미만	19.1천	33.6천	(48.3)	14.5천	75.9
	6개월~1년 미만	0.6천	1.1천	(1.6)	0.5천	83.3
	1년 이상	0.2천	0.4천	(0.6)	0.2천	100.0
실업자		50.3천	69.5천	(100)	19.2천	38.2
실업률		5.5%	7.6%	-	2.1%p	-

자료: 통계청(2020),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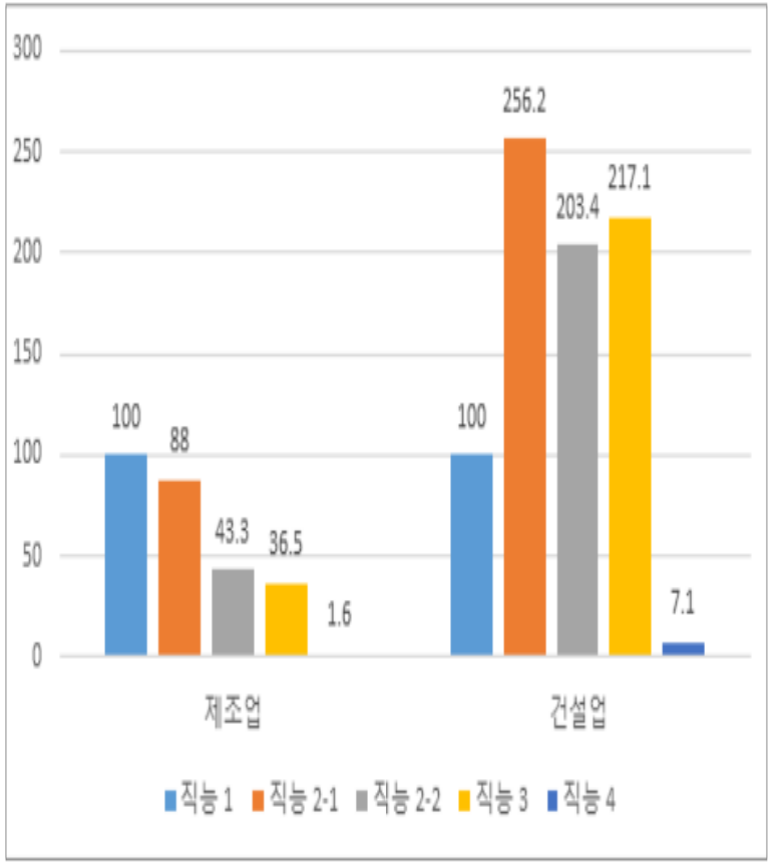
산업별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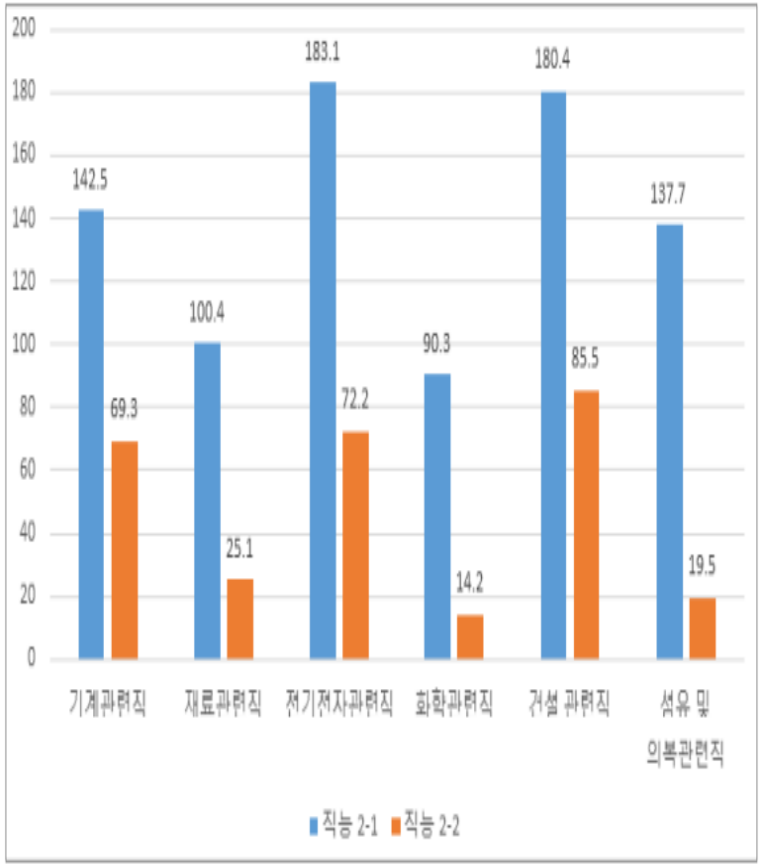
		취업자	농림어업	광·제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외국인	2018. 5.	884.3	49.5	404.9	403.3	110.7	163.2	14.2	141.8
	2019. 5.	**863.2**	**52.1**	**399.4**	**399.1**	**95.0**	**164.5**	**14.0**	**138.3**
	(구성비)	(100.0)	(6.0)	(46.3)	(46.2)	(11.0)	(19.1)	(1.6)	(16.0)
	전년대비 증감	-21.1	2.6	-5.5	-4.2	-15.7	1.3	-0.2	-3.5
	증감률	-2.4	5.3	-1.4	-1.0	-14.2	0.8	-1.4	-2.5
귀화허가자	2018. 5.	34.6	1.1	12.8	12.8	2.8	10.5	0.8	6.6
	2019. 5.	**31.6**	**1.0**	**11.7**	**11.7**	**2.6**	**9.7**	**0.8**	**5.8**
	(구성비)	(100.0)	(3.2)	(37.0)	(37.0)	(8.2)	(30.7)	(2.5)	(18.4)
	전년대비 증감	-3.0	-0.1	-1.1	-1.1	-0.2	-0.8	0.0	-0.8
	증감률	-8.7	-9.1	-8.6	-8.6	-7.1	-7.6	0.0	-12.1

자료: 법무부 통계청(2019),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요 및 현황

직능수준별 직종별 미충원 규모





주: 1직능을 100으로 하여 직능수준별 미충원 규모를 지수화
자료: 이규용(2019),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자료 원자료

이민정책의 변화와 대응

이민정책의 배경

- 한국은 미국, 독일, 중동 등으로 농부, 광부, 간호사, 건설인력 등 노동이민자와 관련 가족 이민자를 내보내던 송출국가
- 한인 이민자(디아스포라)는 2000년대 후반 700만 명 수준(2009년 682만 명)
-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9년 252만 명(전체 인구의 4.8%, 2018년 237만 명, 4.6%)을 돌파했고, 장기체류 173만 명, 단기체류 79만 명, 불법체류 39만 명(2019)

  - 국적별로는 중국, 태국, 베트남 순,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순

- 한국은 서구국가들과 달리 1980년대까지 높은 출산율로 경제성장에 필요한 저임금 숙련노동인력 조달 가능, 1990년대 이후 출산율 급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등 노동자 수요 증가
- 산업화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이동 급증, 농촌지역의 결혼적령기 여성 부족현상, 농업종사 비도시 거주 등으로 농촌총각과 결혼 꺼림, 결혼이민자 증가

이민정책의 변화와 대응

이민정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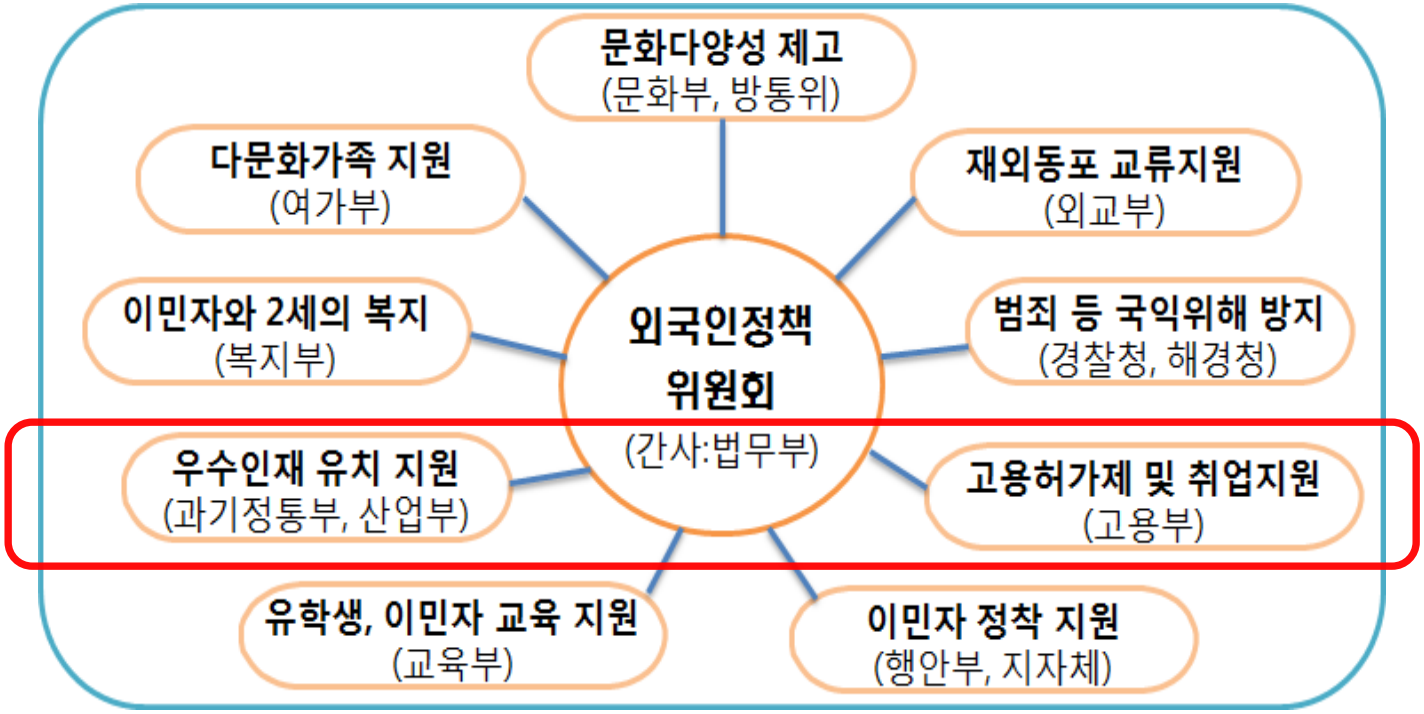
- 이민정책은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분산 관리
- 관련 법령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 2000년대 초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합리적 이민정책 수립 추진을 위한 이민청 신설 논의 시작

  - 부처 업무중복 해소 및 출입국, 체류관리, 국적, 사회통합 및 적응문제 등 해소

-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외국인 관련 정책 총괄 조정, 기능과 권한 제한적, 인력 및 예산제약 등으로 어려움
- 이민 기준(UN, 출신국 떠나 타국에서 1년 이상 체류)을 확대하여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그 자녀 등을 이민자로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 필요

이민정책의 변화와 대응

외국인정책 구조



자료: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이민정책의 변화와 대응

주요 이민정책

- 국적법: 국적취득(출생, 인지), 귀화(요건, 허가), 국적상실, 회복, 재취득 등을 규정한 법률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능력발휘, 이해존중, 사회통합 등 목적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부처 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포함, 외국인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국민과 재한외국인 화합을 위한 세계인의 날(5.20), 세계인 주간 등 지정 운영
- 그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외국인 정책을 추진했으나 1) 우수 외국인재 유치 미흡(취업자격 보유 외국인 대비 전문직 종사자 비중 낮은 수준, 2016년 현재, 전문직 8%(48,334명), 비전문직 92%(549,449명), 2) 2003년 이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직 외국인의 장기체류로 가족동반 요구 등 정주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 발생, 3) 외국인력 유입(국내체류 외국인 수 2016년 기준, 200만 명, 전체인구의 3.9%)으로 국내 일자리 침해 우려(건설업 등 단순기능인력 분야 중심)

이민정책의 변화와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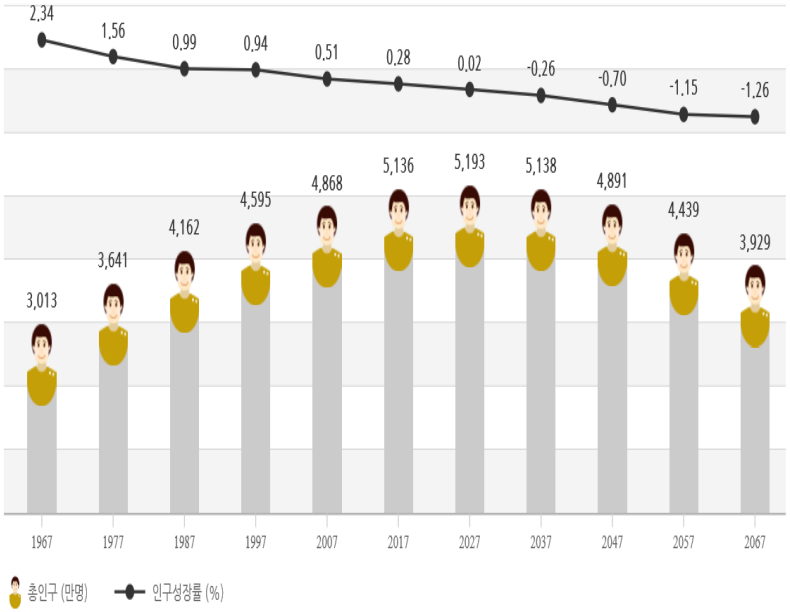
이민정책의 영향

- 이민정책이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효율성(이민자의 숙련 및 인적자본의 기여, 노동력 및 숙련부족에 대응, 외부효과 및 파급효과, 공공재정-세금 vs 공공서비스), 2) 분배, 3) 사회문화적 관점(국가정체성, 사회적 연대), 4) 사회안전과 공공질서(Ruhs. M, & B. Anderson, 2010; 이규용(2014))
- 이민자의 비용과 편익은 유형(단기순환, 정주), 인력의 분야 및 숙련 정도에 따라 달라짐 – 기존 노동시장 상황과 이민자의 산업 및 직업분포에 영향
- 한국의 이민정책은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대응을 통해 발전
- 특히, 외국인력에 대한 노동수요(국가경쟁력 관점), 결혼이민자, 동포 등 정주이민자(사회통합 관점) 증가에 따른 대응과정에서 이민정책 발전
- 이민정책의 핵심요소인 외국인력 활용정책은 주로 기업의 입장을 반영
- 선행연구, 외국인력 공급확대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다수

인구구조 & 인구전략과 이민정책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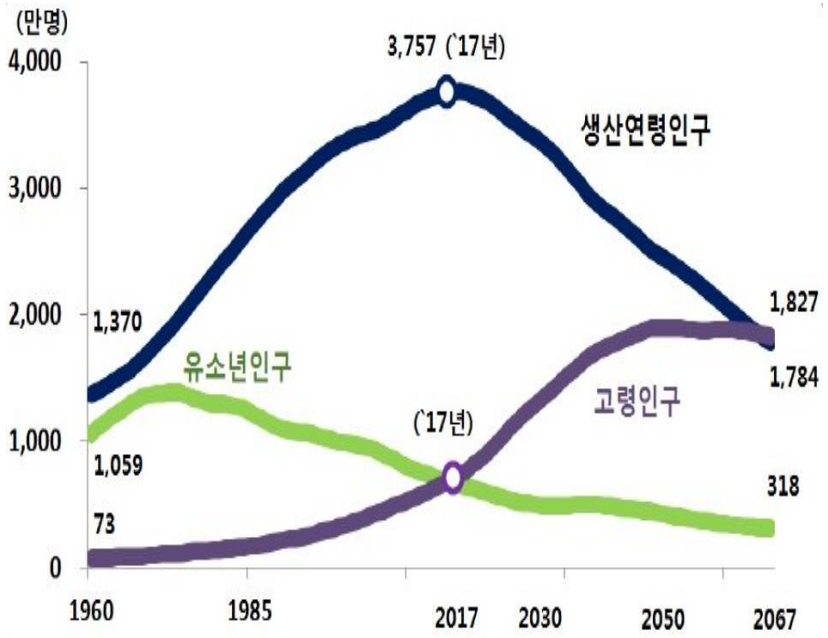
-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 후 감소, 인구의 자연감소는 2019년부터 시작



자료: http://kosis.kr

고령화

- 2017년부터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유소년인구(0~14세)보다 많음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

인구구조 & 인구전략과 이민정책

인구구조 변화

- 한국은 2000년 고령인구 비중이 7.2%로 고령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
- 인구구조 변화는 성장잠재력 저하(장래 국내 총생산(GDP)에 부정적 영향), 사회경제 제도의 적응력 미흡(교육, 의료체계 등), 노후소득 불안정, 세대간 사회적 부담의 형평성 약화, 지방 인구 감소 등에 영향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추진(3차 기본계획(2016~2020)에 108조 투입)
- 2019년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마련하여 4대 핵심전략, 20개 정책과제를 도출 추진
- 일본(외국인력 활용, 해외전문인력 도입-고도인재 외국인에 대한 포인트제도 운영 및 인력부족 업종에 대한 비숙련 유치제도 병행), 스웨덴(외국인력 도입 제한→노동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 추진), 독일(인력부족 직종을 대상으로 포지티브리스트 작성 등 전문인력 이민 촉진)

인구구조 & 인구전략과 이민정책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 생산연령인구의 확충(청년층 노동시장 입직(첫직장) 시기 단축, 정년연장, 해외인구 유입 확대 등), 생산성 향상(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자동화 로봇 확산 등) 대응 필요

해외인구 유입에 따른 GDP 변화

- 2030년 경제활동인구 5%를 해외인구로 유입 시 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 상쇄, 정주형 이민의 경제적 영향이 크게 나타남

	2020	2030	2040	2050	2060
A : 출산율 감소에 따른 효과	-0.4	-0.2	-1.1	-3.0	-5.0
B1 : 경제활동인구의 5%를 해외인구로 유입	-	2.1	0.7	-1.7	-3.7
B2 : 유입된 해외 인구가 정주형 이민으로 전환	-	2.1	1.7	-0.6	-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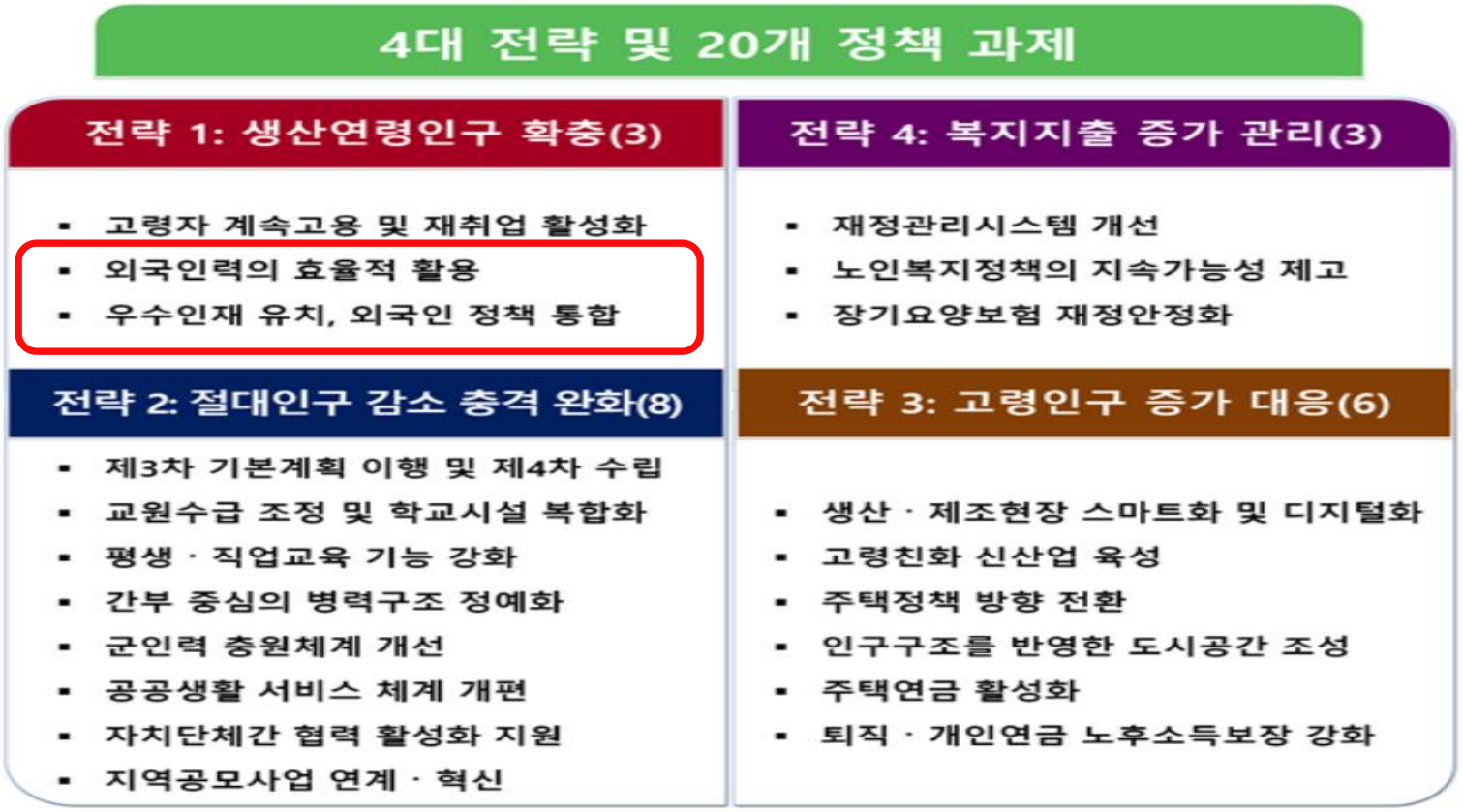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GDP 변화

-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생산성 5% 증가 시, GDP 성장률은 2030년 0.6%, 2040년 0.07% 증가 전망
- 즉, 해외 유입인구의 경제활동참여와 생산성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GDP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시나리오	2020	2030	2040	2050	2060
A : 출산율 감소에 따른 효과	-0.4	-0.2	-1.1	-3.0	-5.0
C1 : 노동생산성 2% 증가	-0.2	0.1	-0.6	-2.5	-4.5
C2 : 노동생산성 5% 증가	-0.03	0.6	0.07	-1.8	-3.7
D : B2 + C2	0.4	2.9	1.9	-0.5	-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자료: 기획재정부(2019), 범부처 인구구조TF

인구구조 & 인구전략과 이민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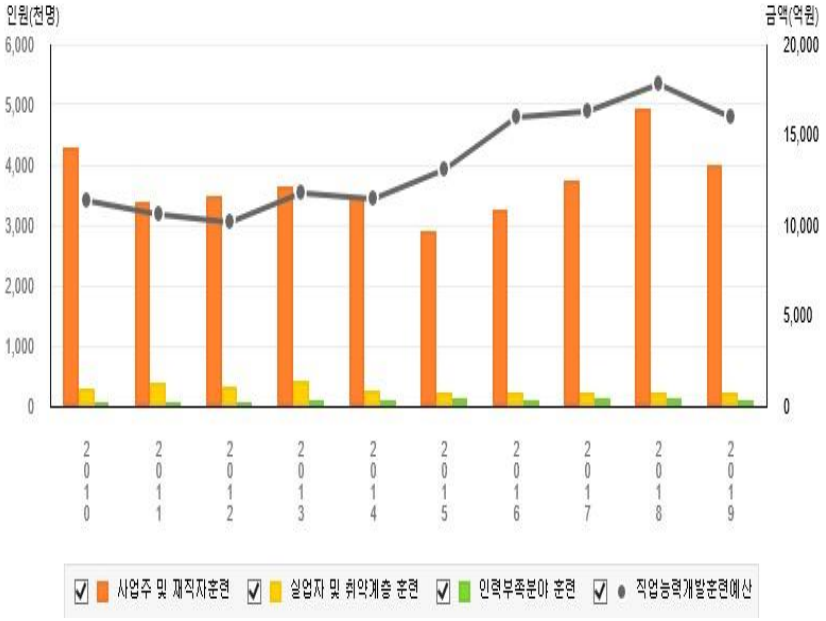
인구전략 차원의 고려

- 적정인구(인구, 경제, 환경측면)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인구(Sustainable, 안정인구) 개념을 반영한 이민정책 검토 필요
- 중장기적 인구변동 관점 보다 인력부족에 대응한 필요인력 충원 관점에서 단기, 저숙련, 단순직종 등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활용
- 인구, 자원, 에너지, 식량, 환경 등 고려, 성장(저성장)과 소득분배(악화) 고려, 국가위상, 지속가능발전, 노인비율 & 적정 출산율, 단계별 인구관리 정책 수립 시행(베이비붐 세대, 청년고용)
- 2030~2050년 총량적 인력공급 부족이 본격화 되므로 여성 및 고령자 고용률 제고와 외국인력 도입 확대 추진
- 외국인력정책은 중장기적 인구변동 관점과 함께 인력부족에 대응한 필요인력의 충원 관점에서 단기적 대응 방식을 유지하고, 재외동포 문제는 노동력 수급 차원이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김용하 외, 2011)

숙련기능인력과 이민정책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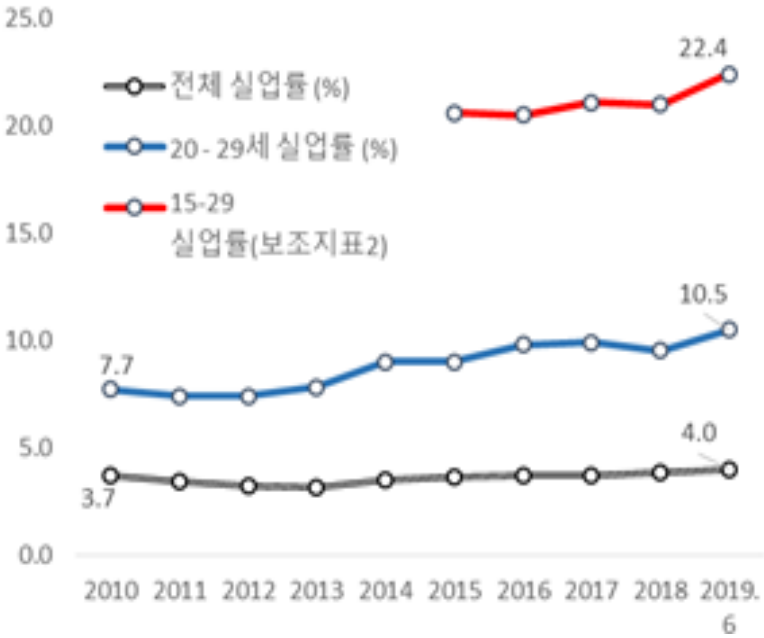
-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자 4,263천 명, 예산 15,966억 원(2019년)



자료: www.index.go.kr

청년실업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이 월등히 높고, 실망실업자 포함 시 더 높아짐



자료: 통계청(각 년도)

숙련기능인력과 이민정책

숙련기능인력 도입 배경

- 1993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도입으로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도입 시작
- 1980년대 이후 인건비의 급등, 3D 업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 등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비
- 불법, 편법 노무종사, 연수업체 이탈 및 불법체류, 임금, 노동권, 근로자지위, 사회보험, 인력송출 등 문제 발생(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금지)
- 이후 연수취업제(제한적 근로자지위 허용, 2000), 취업관리제(중국동포, CIS 일부 서비스업종 취업 허용, 2002), 고용허가제(단순기능인력 외국인근로자 합법 도입, 2003)
-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합법적으로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 해외전문인력에 대한 외국인정책은 전문외국인력 유치와 비자지원 정책으로 구분 가능(연구교육형, 기업활용형)

숙련기능인력과 이민정책

숙련기능인력 도입 현황

- 현재의 뿌리산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쿼터제로 외국인력 활용이 제한적(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의 기술분야이며, 부품 혹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 뿌리산업, 중소제조업, 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부족 업종에 필요한 외국인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E7-4) 운영
- 2014년부터 뿌리산업분야 외국인력 양성대학을 2019년 7개 대학(2018년, 9개 대학)을 지정하여 운영, 연 40명씩 졸업생 배출, 2019년부터는 졸업자 쿼터를 300명으로 확대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은 국내 일자리 보호와 장기체류 방지 등 관리와 통제의 목적이 강하므로 외국인력 도입 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국내 일자리 잠식, 불법체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숙련기능인력과 이민정책

숙련기능인력

- 저숙련 외국인력의 장기체류에 따른 숙련향상, 숙련기능분야에서의 인력난 등을 고려할 때 숙련기능인력 규모의 도입 규모 확대, 양성 및 효과적인 활용은 국내 노동시장과 외국인력 활용 측면에서 전향적 검토 필요
- 현재 외국인력 도입체계가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구분되어 있고, 실제 비전문인력이 기능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능수준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기능수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업종 전문가의 평가설계, 선발기준에 기능평가, 훈련, 경력, 자격 등 포함

- 국내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력은 이를 수요로 하는 기업에 우선 공급 기회 부여(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고용허가제 개선), 해당분야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자격-훈련-채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 필요(입국 이후 역량개발, 숙련향상 기회 부여)

제언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민정책 접근

- 이민정책은 외교안보, 노동복지 등 경제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범분야 이슈
- 단기적, 근시안, 일회성 대응으로는 한계와 문제점 노출 가능성 매우 높음
-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방적 이민정책 추진(다만, 높은 청년실업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국내 노동시장 및 일자리 상황도 고려)

열린 국가, 포용의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통합적 이민정책 추진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리더로 인정받고, 주도하기 위한 기본조건
- 다문화사회, 이민사회 등을 포함하는 이민정책은 매우 민감한 이슈이므로 이해관계자 입장, 현장 상황 등을 기초로 한 이민정책의 수립과 집행
- 자본과 기술, 역량을 보유한 고급전문인력 수용 확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를 국민으로 포섭, 적극적인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단순노무인력과 불법체류자 등을 아우르는 통합의 이민정책과 전략 마련

제언

인구전략을 고려한 인구정책, 이민정책, 고용노동정책 연계

- 초고령화 사회, 초저출산 사회는 기정사실, 현실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
-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규모의 인구에 맞는 제도정책 구상 및 대응(국가차원의 인구전략+외국인력 수급 규모, 수준+일자리, 숙련수준 등 연계)

숙련기능인력 도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

- 외국인노동력의 수요 범주와 대상을 숙련기능인력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농업, 영세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외국인 노동력의 도입 분야, 규모 결정 시 숙련수준도 함께 고려)
- 불법체류의 한계효용이 단속과 추방비용을 능가할 경우 단속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귀국장려금 지급(유럽, 일본),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고용계약 유도, 입국제도 강화 등 추진

제언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도입 절차와 방법 체계화

- 기존 인력부족 판단지표 및 결정방식(업종별 인력부족 규모 추정)과 함께 정기적으로 숙련기능 외국인력 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조기에 수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현행 고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한 노동시장 정보 제공(외국인력 부문 추가), 기업-외국인력 간 쌍방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 확대, 외국인력 도입 분야(직종, 직무)와 국내 노동시장의 중복 충돌 부분에 대한 정기 분석과 전망 추진

다문화정책의 획기적 개선

- 서구 사례에서도 다문화 문제는 인종,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범죄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슈
-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융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정책 추진

감사합니다!

kimch@krivet.re.kr

'국익'을 넘어서:
인권 관점에서 이주 바라보기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이주와 관련해서 인권을 언급하면?

- 한쪽에서는 양심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 칭찬이 들린다.

-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 실리는 무시하고 명분에만 집착하는 사람
  - 국제사회의 냉혹함을 모르고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
  - 국익과 한국인을 저버리고 외국인만 챙겨주는 사람
  - 낭만적인 아마추어, 감성팔이...

- 후자의 이런 비판이 정당할까?

뉴스 제목 몇 가지...

1)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 산업재해 발생, 매년 사망자 수 100명 (에너지데일리 2020. 10. 26)
2) 외국인 산재 발생률, 내국인보다 6배 높아 (연합뉴스 2017. 10. 12.)
3) 산재사고 당해도 병원 못 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설움' (노컷뉴스 2019. 12. 5.)
4)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요?"...외국인 노동자의 절규 (매일경제 2020. 10. 27.)
5) 산재 사망 노동자 10%가 이주노동자 (경향신문 2019. 10. 3.)

코로나19와 이주민 차별

- 사태 초기에 외국인들의 마스크 구입 어려움
- 방역대책과 긴급재난지원금 수혜에서 차별
- 이주노동자만 코로나19 의무 검사 부과
-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외국인학생 제외
- 일부 자치구의 교복지원금 지급에서 외국인학생 제외
- K-방역에 대한 열광의 이면에는 외국인(특히 중국 출신)에 대한 혐오 급증

➔ 서구의 아시아인 차별에 분노하는 우리. 그러나 우리의 대응도 다르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 “인권이 코로나19 대응의 열쇠”

우리의 이분법

- 외국인 아니면 내국인
- 합법체류자 아니면 '불법'체류자
- 다문화정책의 대상자 아니면 단신의 단기취업노동자

  ➔ 단신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고, 노동자만도 아니다.

  ➔ 그에 맞춰 정책도... 다문화가족 우대 : 나머지 푸대접

- 이런 방식의 이분법과 대응이 적절한가
- (역설적이게도) 동화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다문화정책을 제외하면 외국인력도입정책만 있을 뿐,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민정책/이주민정책이 과연 있나

변화하고 있는 현실

- 국내 상황
  - 정주형 장기체류자 증가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의 50%는 정주형 체류자)
  - 등록자와 미등록자 모두에서 가족단위 체류 급증 (15세 이상 인구 중 2인 이상 가구가 78.2%)
  - 코로나19 이후 체류외국인 숫자가 줄었지만, 향후 다시 늘 전망

- 전지구적 상황
  - 국경을 넘는 사람의 증가
  - 국적과 거주지의 분리 증가
  - 한 사람이 하나의 국가에 속하는 모델의 지속 불가능
  - 국적에 기초한 권리 개념의 변화 필요

이주민의 권리: 인권 대 시민권

- 인권:
  - 개인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서비스 ➔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

- 시민권
  - 어떤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주어지는 법적 지위
  -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서로에게 또는 공동체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위

    ➔ 성원(국민)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권리

- 한국은 둘 사이의 간격이 크다... 인권과 시민권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 국익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책은 너무도 당연하다.

  ➔ 그러나 '국익만' 소중하게 여기는 정책은 큰 문제

- 비정상적인 우리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가장 말단의 이주민에게 모든 위험과 차별을 전가함으로써 내국인이 안전과 풍요를 누리는 구조 ➔ 무관심이 아니라 범죄다.
-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는 각종 구조조정

  ➔ 비정규직화, 민영화, 외주화

  ➔ 이런 몰아내기의 가장 밑바닥에 이주민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 건강보험: '합법' 이주노동자조차 가입률 61%

  ➔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 방치 (40만 미등록자들은 아예 배제)

-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행 씨의 사망으로 드러난 열악한 주거환경

  ➔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대책 요구해왔던 사안

- 출생등록이 안 되는 이주아동

  ➔ 약 1.3만 명으로 추산, 학습권/건강권 등에서 배제됨

-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현실...

다시 생각하는 '국익': 구체적으로 누구의 이익인가?

- 국익 : 고용주 이익 : 노동자 이익
- 현재의 인력도입 정책은 고용주가 원하고 국가가 승인한 결과
- 내국인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 도입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기에는 반대했다.
- 이제는 한국 사회와 경제의 일부

  ➔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정착

  ➔ 착취와 배제의 대상이 아닌 공존과 연대의 대상

이주 인권과 관련한 국제기구 동향

- 유엔 인권기구는 한국 정부에 이주민 인권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제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해서 사회권위원회, 자유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등에서 반복해서 지적함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990년 채택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80여 개의 인권관련 국제조약 중에서 7개가 '비준과 실행 되어야 할 기본적인 조약'으로 규정

  - 한국은 그 중에서 이 협약만 비준하지 않음. 다른 선진국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하는가
-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한국 포함 164개국 승인, 유엔총회에서 채택 (2018년 12월)

  - 그래서 그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

- 인권 친화적인 이주 정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실천 의지의 문제다.

1. 다문화축제와 한글교실만 잘 운영하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기
2. 국제인권기구가 요구하는 인권기준을 지키지 않는 이민정책은 공허
3. 이주민의 계급/계층 문제를 보지 않고 국적/인종/민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초점 흐리기
4. 이주민을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의 해법으로만 보는 것은 반인륜적
5. 인종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는 다문화정책은 허구

SDGs 이주 지표 모니터링 방안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진 유 강

목 차

1. SDGs와 데이터 모니터링 체계

2. SDGs와 이주

3. 이주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가용성 연구

4. 이주 지표 모니터링 과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 총회('15.9)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
  - 경제·사회·환경 이슈를 포괄하며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포용성이 목표달성의 핵심
- 169개 세부 목표와 231개 지표를 근거로 매년 이행상황 점검
  -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매년 7월),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매년 3월)
  - 개별 국가들도 정기적으로 SDGs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유엔 HLPF에서 자발적 국별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형태로 발표 (한국은 2016년도 제출한 바 있음)
- 유엔 SDG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 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SDGs 데이터 모니터링

- 유엔은 **각 국 통계청을 '데이터 책임기관**(national focal points)'**으로 지정**하여 국 별 데이터 수집
- **통계청은 한국 SDGs 데이터 책임기관**으로, 국내 데이터 관리 총괄('17~)

< 4대 핵심사업 >

1. SDGs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및 데이터 관리
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발간(매년, 국, 영문)
3. SDGs 오픈 플랫폼 운영(국, 영문)
   - http://kostat.go.kr/sdgs
4. SDGs 지표 개선개발 연구 ('15~, 15건)
   - GIS, 범죄, 세분화(젠더, 이주, 장애 등)

SDGs 국내 데이터 관리현황 ('21.5월 기준)

- 국내 데이터 가용률 : 59%
- 소관 부처 : **24개 부처**
  - 환경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외교부, 법무부, 인권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표 개수 순)
- 국가 승인통계 : **63종**
- 주요 미제공 사유
  - 방법론 차이, 개념 불분명, 관련 항목 미조사, 정책적 판단

SDGs와 이주

이주의 중요성,
이주민 보호,
난민 인권 등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ble Development (UN, 2015)

"We recognize the positive contribution of migrants for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 also recognize that international migration is a multi-dimensional reality of major relevance for the development of countries of origin, transit and destination, which requires coherent and comprehensive responses. We will cooperate internationally to ensure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involving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humane treatm migrants regardless of migration status, of refugees and of displaced persons. Such cooperation should als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communitie refugees,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We underline the right of migrants to return to their country of citizenship, and recall that States mu their returning nationals are duly received." (Paragraph, 29)

이주상태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
필요

"They will be rigorous and based on evidence, informed by country-led evaluation and data which is high-quality, accessible, timely, reliable and disaggregated by income, sex, age, race, ethnicity, migration status, disability and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context" (Paragraph, 74(b))

	세 부 목 표	지표수
4.b	선진국이나 다른 개도국에서 고등교육을 위한 장학금 확대	1
8.8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 및 이주근로자(특히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촉진	4
10.7	안전하고 질서있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잘 관리된 이민정책 수립 및 이행	1
10.c	2030년까지 이민자 송금수수료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	2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3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이주상태, 장애, 지역, 기타 국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3

SDGs 내 이주 지표

직접 지표	세분화 지표	간접 지표
10.7.1 이주근로자 취업비용 10.7.2 이주정책 구비 여부 10.7.3 이주과정 중 사망·실종자수 10.7.4 난민인구 비율 10.c.1 송금 총액 대비 송금비용 4.b.1 장학금 ODA 금액 16.2.2 인신매매 피해자수	8.8.1 치명·비치명적 산업재해 건수 8.8.2 ILO 노동권 준수 수준	1.1.1 국제빈곤선 미만 인구비율 1.3.1 사회보장포괄범위 3.1.1 모성사망률 3.2.1 5세미만 영아사망률 3.3.1 HIV 감염자수 3.4.1 심혈관계질환 사망률 3.8.1 기초보건보장 범위 3.8.2 가구지출 중 보건지출 비율 4.1.1 최소숙달수준 아동비율 4.3.1 형식/비형식 교육참여비율 4.6.1 문해수리력 숙달수준 5.5.2 여성 관리자 비율 8.3.1 비농업부문 비공식 취업비율 8.5.1 시간당 평균 임금 8.5.2 실업률 8.6.1 교육,고용,훈련 상태가 아닌 청년비율 8.10.2 금융계좌 보우 성인비율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비율 10.3.1 지난 12개월 간 차별경험 비율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등 거주 도시 인구비율 16.1.3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노출 비율 16.9.1 5세미만 출생등록 비율

참고 : Go(2019), 조영희(2018)

이주 지표 국내 데이터 제공현황 ('21.5월 기준)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수록 여부	미수록 사유
10.7.1 이주근로자 취업비용	ILO/Worldbank	미수록	해당항목 미조사
10.7.2 이주정책 구비여부	UNDESA, IOM, OECD	미수록	설문 미응답
10.7.3 이주과정 중 사망·실종자수	IOM	수록	-
10.7.4 난민인구 비율	UNHCR	수록	-
10.c.1 송금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Worldbank	미수록	글로벌 자료
4.b.1 장학금 ODA 총액	OECD	미수록	글로벌 자료
16.2.2 인신매매 피해자수	UNODC	미수록	작성 불가 의견
8.8.1 치명/비치명적 산업재해 건수 (세분화)	ILO	부분수록(전체)	기준 차이
8.8.2 ILO 노동권 준수여부 (세분화)	ILO	미수록	글로벌 자료

- 미수록 사유는 '20.4~5월 실시한 부처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름(진유강 외, 2020)
- 글로벌자료는 국제기구에서 직접 작성하는 자료를 의미함

이주 지표 데이터 가용성 연구 ('21.4~9월)

- **(연구목적)** 이주 지표에 대응하는 국내 통계를 검토하여 글로벌 지표 개념과의 정합성 판별하고 국제기구 데이터 제공 가능성 분석

  → 이주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거버넌스 구축, 국내 이주 관련 통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대상)** 이주 직접지표, 세분화 지표, 간접지표 총 7개

지표	지표명	연계통계(안)
10.7.1	이주국가에서의 월 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 비용 비율	이민자체류실태조사,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10.7.2	질서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	부처 설문조사
10.c.1	송금 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이민자체류실태조사
8.8.1	근로자 1십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건수(성 및 이주상태별)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통계,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8.8.2	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상태별)	부처 설문
8.5.1	근로자 평균 시간당 임금	이민자체류실태조사, 국세통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8.5.2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민자체류실태조사

[사례1] 지표 10.7.1

지표명 : 이주 국가에서의 월 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비용 비율

* recruitment cost borne by employees as a proportion of monthly income earned in country of destination

글로벌 지표 메타데이터	국내 유사통계
• 지표정의 : 국제 이주근로자의 월소득 대비 자부담 취업비용의 비율 • 산식 : (이주근로자 취업비용/이주근로자 월소득)*100 • 포함항목 : 취업소개료, 비자비용, 국내외 교통비, 여권발급비용, 의료비, 보험료, 언어습득비용, 기술시험비용, 계약승인료, 취업비용 지불을 위해 받은 대출금 이자 등 총 14개 • 월소득 : 이주국가의 첫 근무지에서 받은 월소득 (최근 3년 이내)	• 통계명: 이주민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관련 항목 : 직장(사업체)를 구할 때 취업소개료 지불 유무 및 수준 (특성항목) • 조사대상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 조사주기 : 3년 ('18년) • 주요 결과 : 지불함 (12.7%), 지불하지 않음(87.3%) - 15만원 미만(56.5%), 15~30만 미만(30.6%) 30만원 이상(12.9%)

[사례1] 지표 10.7.1

- **주요 이슈**
  - 대상자 선정 : 이주근로자의 범위(외국인근로자 전체 vs 체류자격별)
  - 최근 3년 기준 : 입국년월 기준 vs 3년 이내 첫 직장
  - 조사효율성 (조사항목) : 14개 항목 전체 vs 선별 vs 선별 조사 후 통합
  - 거버넌스 : 외국인근로자(고용노동부), 이민자실태조사(법무부, 통계청)
  - 대안 : 행정자료 (고용허가제 시스템 등)

[참고] 설동훈, 고재훈(201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연구, 산업인력공단.

- E-9 비자로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 1,875명 대상 표본조사
- 취업비용 조사결과 : 약 267만원 소요
  - 항공료 등 직접비용: 162만, 민간브로커 비용:138만, 해외출국부담금:56만, 한국어시험교육비:44만, 급행료 등 비공식비용:40만, 한국어시험응시료:23만, 기타:64만
- 임금수준 : 평균 171.7만원

[사례] 지표 8.8.1

지표명 : 근로자 1십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건수(성 및 이주상태별)
* fatal and non-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 by sex and migration status

글로벌 지표 메타데이터	국내 유사통계
• 지표정의 : 십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의 수로 각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측정 • 산식 - (치명적 재해자수/전체 근로자수)*100,000 - (비치명적 재해자수/전체 근로자수)*100,000 • 자료수집 : 산업재해 관련 행정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조사자료로 보완	• 통계명 : 산업재해현황 (고용노동부) / 조사주기 : 월 • 항목 :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률 등 (세분화 :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산업별) • 쟁점 : 외국인근로자 세분화 어려움, 미보고 사례 누락 가능성
	• 통계명 : 산재보험현황 (고용노동부) • 항목 : 외국인근로자 보험급여 지급현황 (매년, 행정자료) • 주요 결과 - 외국인 수급자수 : 4,238명('04) → 14,259명('19) • 쟁점 : 산업재해 유형별 분석 제약
	• 통계명 :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 항목명 : 산업재해 발생현황(외국인근로자, 사고유형별(사망,질병) • 조사주기 : 3년 ('17년) • 주요 결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전체(88.51명, 사고자(81.85명), 사고사망자(1.72명), 질병자(6.66명), 질병사망자(1.3명) • 쟁점 : 사업장 중심 자료로 실제 발생 건수와 차이

이주 지표 모니터링 과제

- 지표 소관 국제기구가 다양하여 글로벌 수준의 통합적 모니터링의 한계

  → 직접지표 외에도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일관된 가이드라인 등 부재

- 국내 모니터링을 위한 소관 정책부처와 통계 생산부서간 거버넌스 구축 필요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이주근로자의 범위: 전체 외국인 근로자 vs 특정 체류자격

- 이주민의 다층적 특성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 여성 외국인근로자, 연령, 국적 등
- 장기적으로 표본조사에 이주민을 통합하는 방안과 행정자료의 활용 고려
- 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변화와 SDGs 세부목표 달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감사합니다.

sdgkostat@korea.kr

<제14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초등학교 다문화교육 살펴 보기

2021.06.02

서울장안초등학교 교사 권보민

Contents

01.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현황

: 다문화 학생 재학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기타기관 지원 현황

02. 다문화교육 운영의 실제

: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

학교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이 갖는 의미

03. 다문화교육 운영에 대한 생각들

: 다문화교육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이야기

보다 나은 교실을 위한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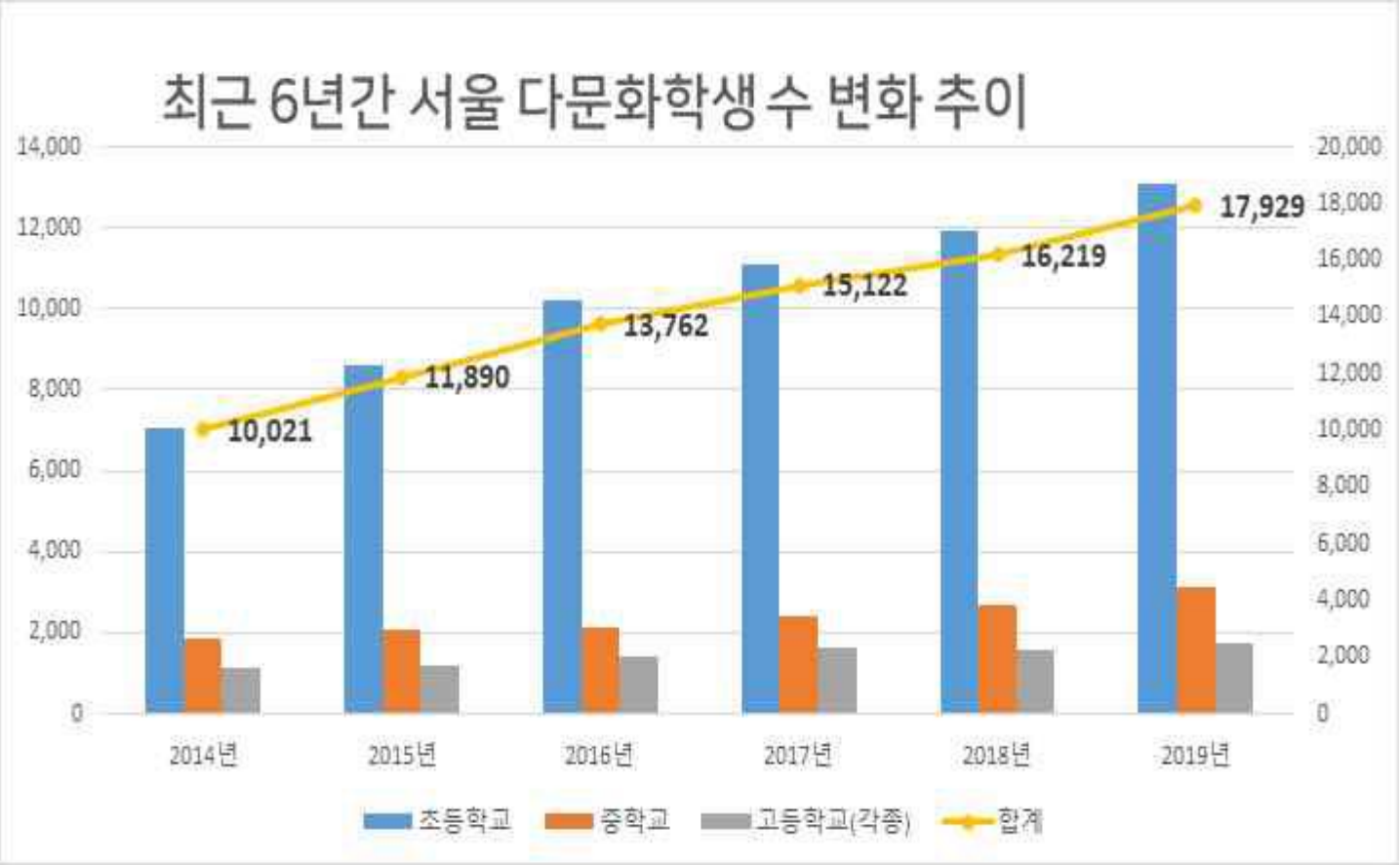
01.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현황

: 다문화 학생 재학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기타기관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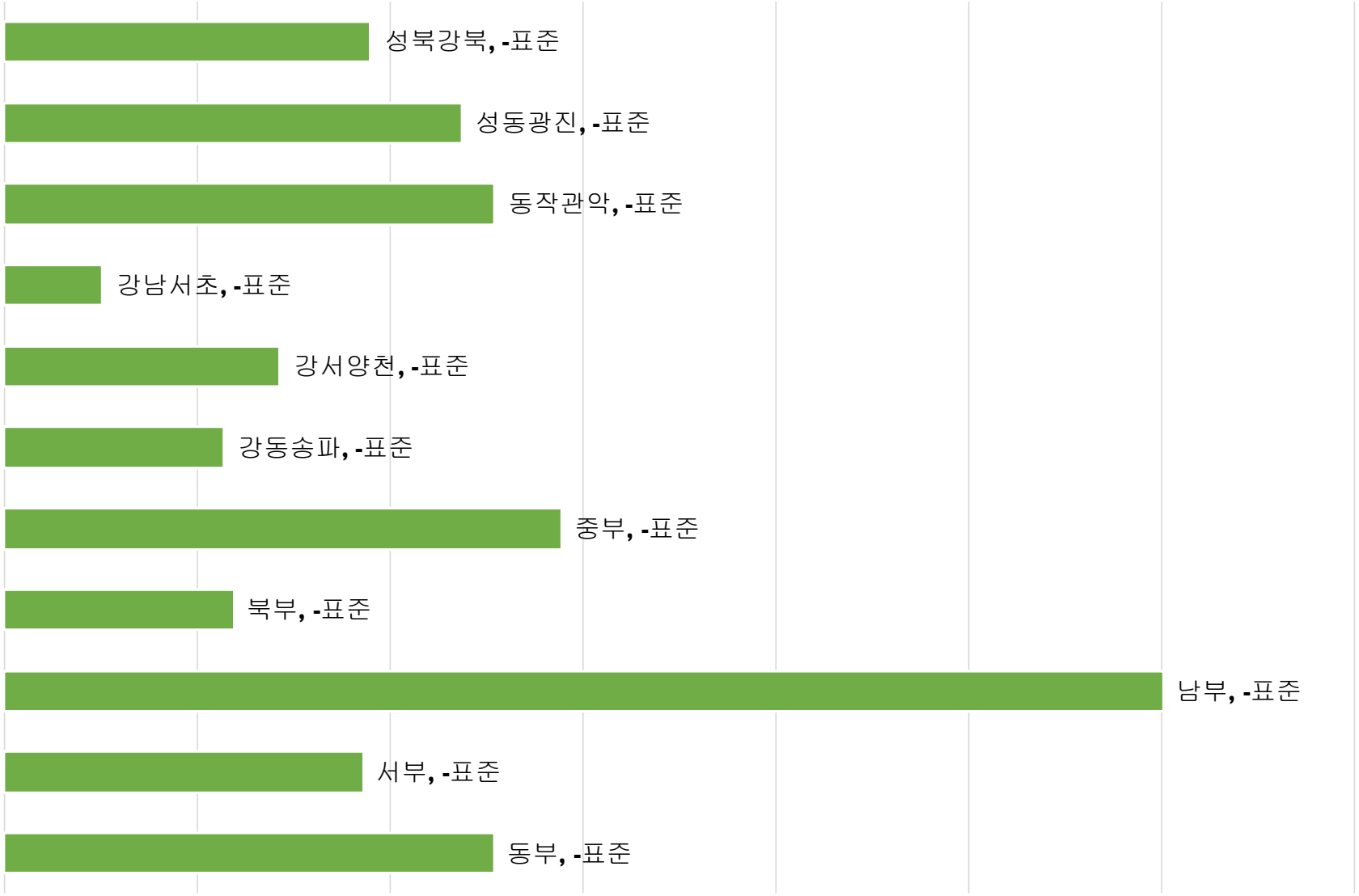
1.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 다문화학생 현황

	전체학생 수	다문화학생 수
2014년	1,067,998	10,021(0.94%)
2015년	1,025,732	11,890(1.16%)
2016년	975,589	13,762(1.41%)
2017년	938,302	15,122(1.61%)
2018년	903,941	16,219(1.78%)
2019년	869,632	17,929(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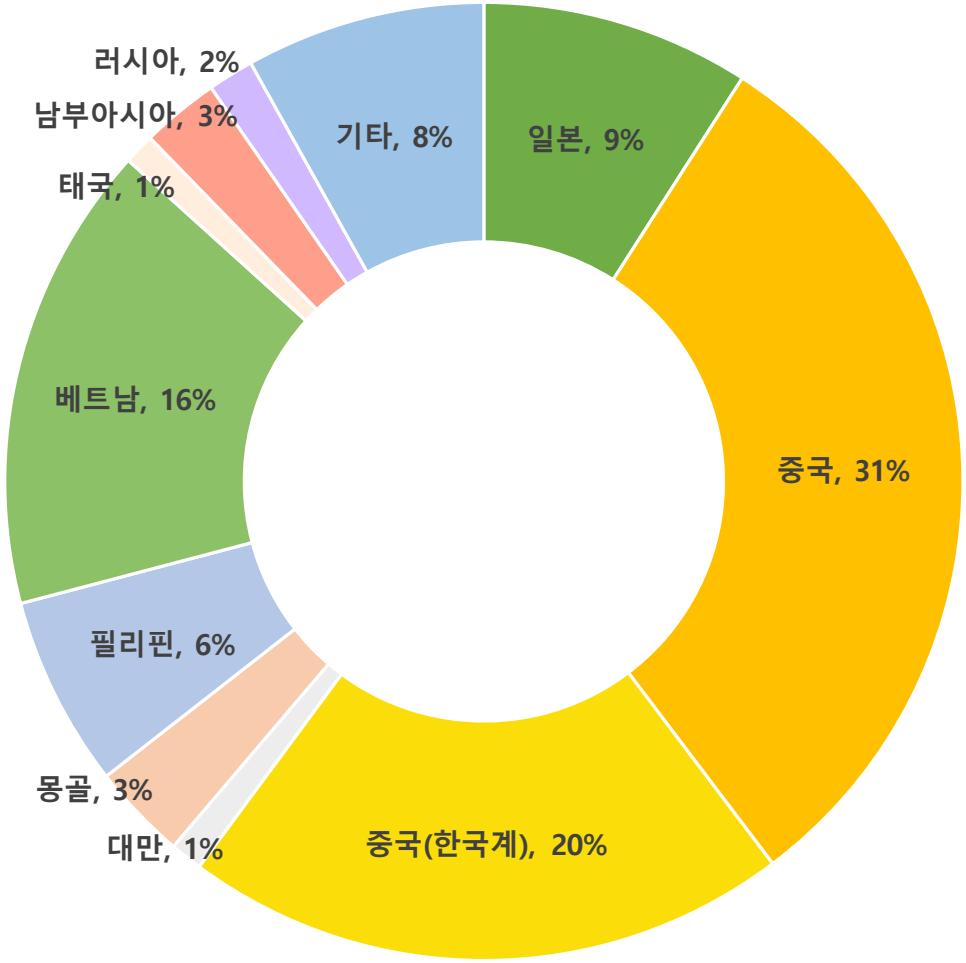
1.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 다문화학생 현황

교육지원청별
다문화 재학생 수



1.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 다문화학생 현황

주요 이주배경 국가



1.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 서울특별시교육청

1. 다양한 정책학교 운영

- 다문화 특별학급
- 다문화 정책학교
-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 위탁형 한국어 예비학교
- 다문화 혁신학교
- 다문화 지원학교
- 다문화 연구학교
- 문화다양성 실천학교

2. 언어교육 지원

- KSL 교육과정
- 대학생 멘토링
- 이중언어 교재 보급
- 다문화 언어강사 지원
- 이중언어교실 강사 배치
- 이중언어 교재 및 체험교실 지원
- 한중 언어문화 체험단
- 글로벌 언어캠프

1.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 서울특별시교육청

3. 적응, 진로 상담

- 진로상담 서비스
- 심리정서 상담 지원
- 징검다리과정 프로그램
- 다문화상담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 예술융합형 심리정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연수
- 지역사회 연계 상담체계 구축
- 다문화 학부모용 안내자료 배포

4. 교사 연수 및 교육 환경 지원

- 다문화교육 교사 연수 강화
-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세계시민, KSL 등)
- 관련 연수자료 개발 및 배포
- 다문화교육지원단
- 학교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 서울다문화지원센터,다+온센터

1.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 유관 기관 프로그램

서울특별시청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유네스코 – CCAP 프로그램

APCEIU –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02. 다문화교육 운영의 실제

: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

학교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이 갖는 의미

2. 다문화교육 운영의 실제

안전 · 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 · 금융 교육, 환경 · 지속가능발전 교육

교과 + **창의적체험활동**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제시

+ 다문화교육 주간 운영
  세계인의 날 운영
  인권교육 강조

6사07-03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다양성 존중, 감수성 (세계의 생활문화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간의 관계)
6사07-04	의식주 생활에 특색이 있는 나라나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자연적, 인문적 요인을 탐구한다.	다양성 존중, 감수성 (세계의 생활문화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간의 관계)
6사07-05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의 기초적인 지리 정보를 조사하고, 정치·경제·문화면에서 맺고 있는 상호 의존 관계를 탐구한다.	다양성 존중, 문화적 감수성, (국토의 지역 구분과 지역성, 우리와 관계, 밀접 국가의 지리적 특성, 우리 인접 국가의 지리 정보 및 상호 의존 관계)
6사07-06	이웃 나라들(중국, 일본, 러시아)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의 태도를 기른다.	다양성 존중, 문화적 감수성, (국토의 지역 구분과 지역성, 우리와 관계, 밀접 국가의 지리적 특성, 우리 인접 국가의 지리 정보 및 상호 의존 관계)
6사08-03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갈등 관리 (지역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
6사08-04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개인,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의 활동 사례를 조사한다.	갈등 관리(지구촌 평화,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남북통일)
6사08-06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갈등 관리 (지속가능한 미래)

기본

영화 감상문 쓰기

1. 영화 「피부 색깔=꿀색」의 장면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 봅시다.

인물 표정이나 몸짓을 따라 해 보면 어떨까?

인물이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 봐도 좋겠어.

5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넣어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A: What are you going to _____ after lunch?

B: I'm _____ to go to the library.

A: I'm _____ _____ do my _____.

Let's go to the _____ together.

보충 심화

Culture Activity

창의 · 융합

1 여러 나라의 졸업 시기를 알아봅시다.

영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을 골라 봅시다.

1 December 2 June 3 Janu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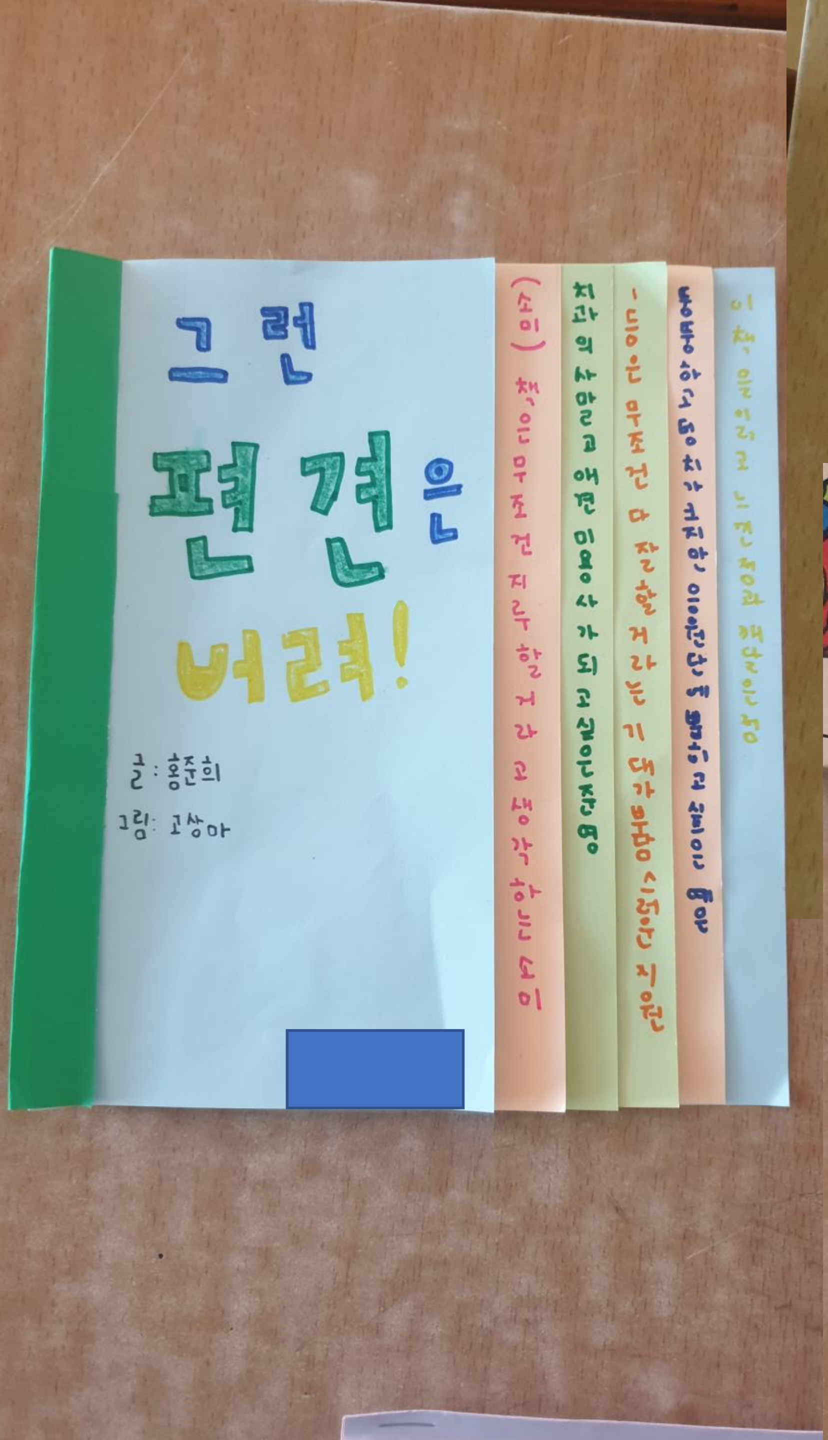
미국의 졸업 시기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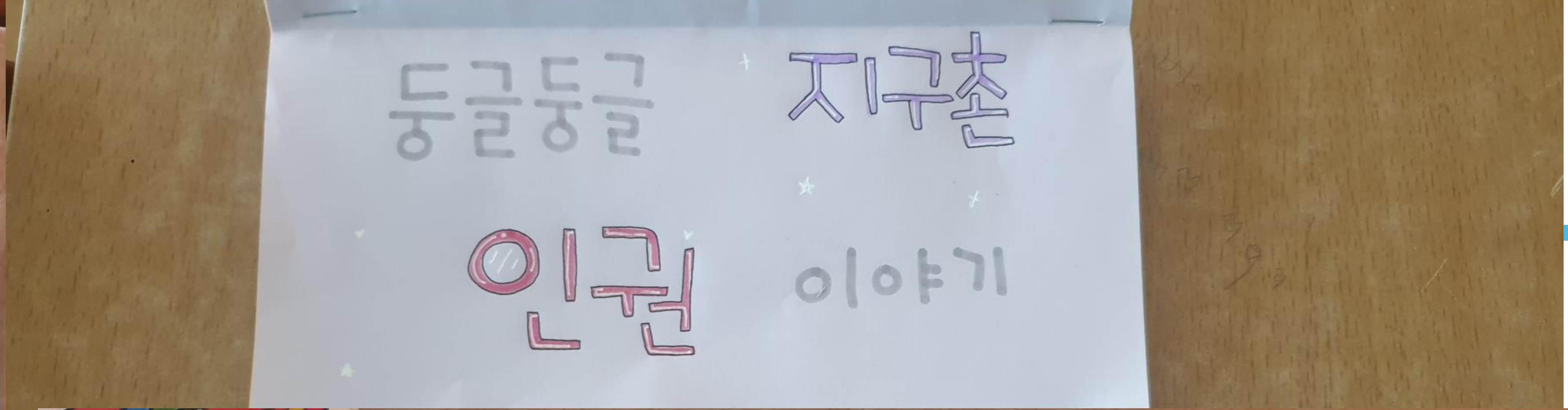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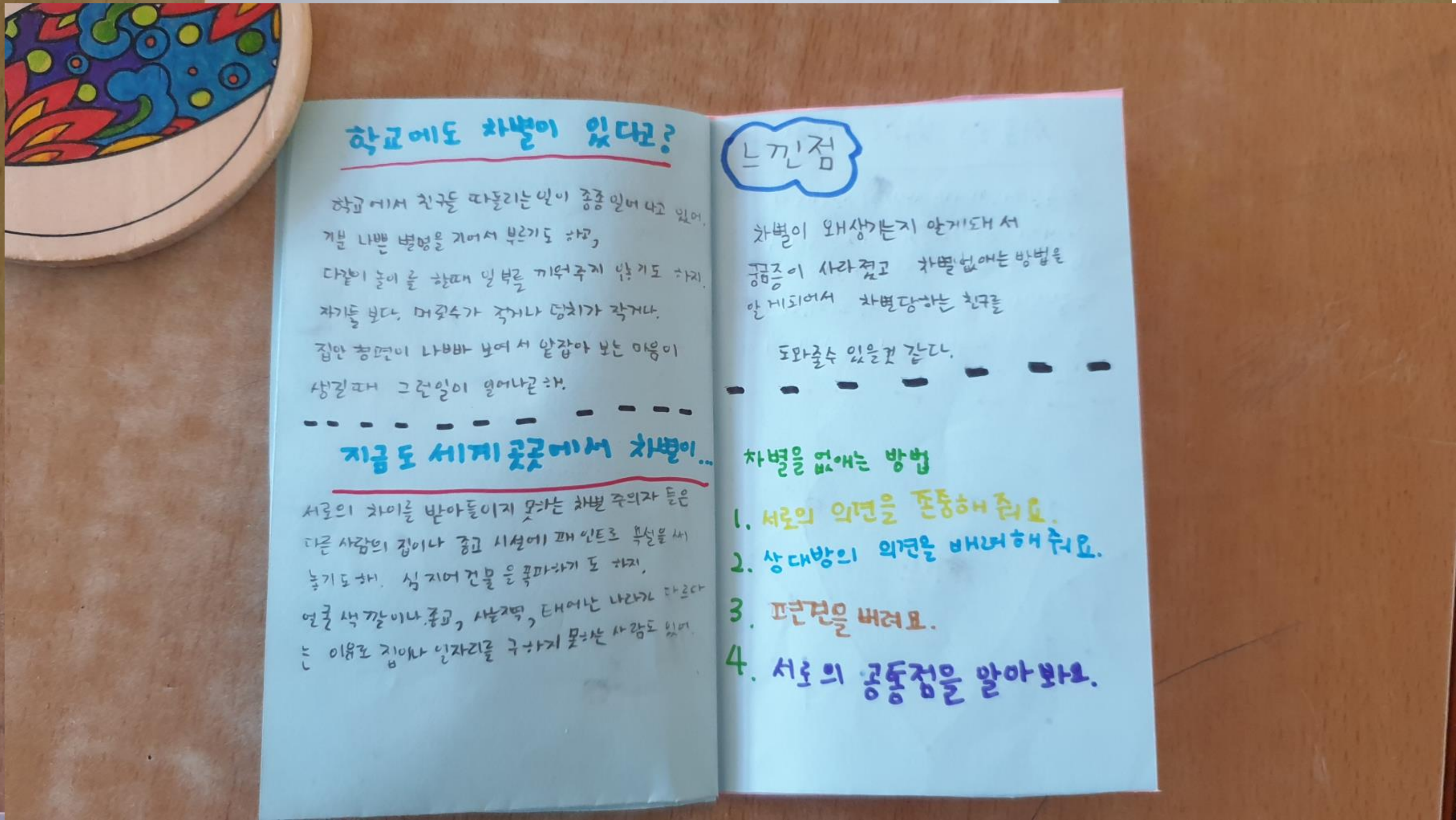
3학년 국어과 교수·학습과정안

단 원	국어 – 5.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차시	9~10/10 (2차시수업)
본시주제	내가 읽은 책 소개하기	장소	3-5 교실
학습 목표	읽은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핵심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자료 및 정보 활용 역량		
성취기준	[4국02-02]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문화교육요소	문화이해, 관점 수용 및 공감, 의사소통능력	교육방법	문제해결학습모형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다른 친구들이 책 소개하는 영상 보기 - 영상 속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 책의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 학습목표 확인 읽은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활동 1. 책을 소개하는 글 살펴보기 활동 2. 책 소개하는 글쓰기 활동 3. 발표하기	5′	㉮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동영상 ㉮ PPT, 판서
<전개>	<학습활동1> – 책을 소개하는 글 살펴보기 ◎ 선생님이 쓴 책 소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기 · 무엇에 대해 설명한 책인가요? · 국적이란 무슨 뜻인가요? · 인종이란 무슨 뜻인가요? · 대한민국 국민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 선생님이 쓴 책을 요약한 글을 보고 잘된 점과 고쳐야할 점을 찾아봅시다. · 선생님은 왜 이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을까요? ◎ 소개하는 글의 구성 살펴보기 · 선생님의 책을 소개하는 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 책이 길 때는 어떻게 요약해야 할까요? · 어떻게 소개해야 책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학습활동2> 책 소개하는 글쓰기	15′ 10′ 25′	㉮ 학습지-'다문화 사회'책을 소개하는 교사 글 포함 ㉯책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개할 내용 외의 것은 학습자가 덧붙이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 책의 내용을 간추릴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구성 요소와 관련된 발문을 하도록 한다


그런
편견은
버려!
글: 홍준희
그림: 고상마
(소미) 책은 무조건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는 소미
치과의사 말고 애견 미용사가 되고 싶은 준영
1등은 무조건 다 잘할 거라는 기대가 부담스러운 지원
통통하고 몸치가 크지만 이어달리기 뽑히고 싶은 예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과 깨달은 점


둥글둥글 지구촌
인권 이야기


학교에도 차별이 있다고?
학교에서 친구들 따돌리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
기분 나쁜 별명을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
다같이 놀이를 할때 일부를 끼워주지 않기도 하지.
자기들 보다 머릿수가 적거나 덩치가 작거나,
집안 형편이 나빠 보여서 얕잡아 보는 마음이
생길때 그런일이 일어나곤 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차별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차별 주의자 들은
다른 사람의 집이나 종교 시설에 페인트로 욕설을 써
놓기도 해. 심지어 건물을 폭파하기도 하지.
얼굴 색깔이나 종교, 사는지역,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
는 이유로 집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느낀점
차별이 왜생기는지 알게돼서
궁금증이 사라졌고 차별없애는 방법을
알게되어서 차별당하는 친구를
도와줄수 있을것 같다.
차별을 없애는 방법
1.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줘요.
2. 상대방의 의견을 배려해 줘요.
3. 편견을 버려요.
4. 서로의 공통점을 알아 봐요.

2. 다문화교육 운영의 실제

다문화교실 운영

2. 다문화교육 운영의 실제

* 베트남 전통의상은 결혼식, 설날, 축제, 행사…말고 일하거나 학교 다닐 때도 입습니다.

다문화 수업, 캠프

방과후 지도 및 상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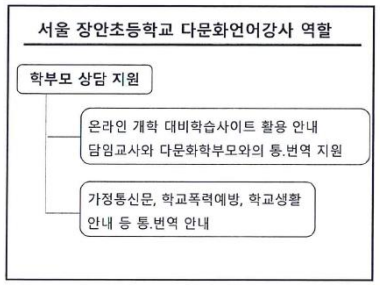
방과후 다문화학생 지도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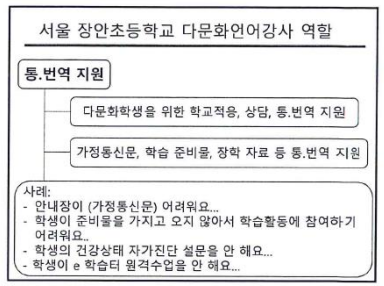
2020년 6월 지도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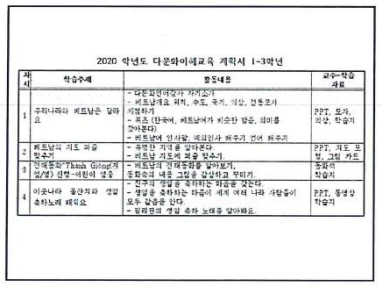
지도날짜	시간	반	지도학생	지 도 내 용		비고
6/8 (월)	13:50~ 14:30	2-5		국어 수학	- 수/암 언어 배우기 - 더하기와 빼기/ 훈민정음 제 1과	맞춤법이 아직 잘 못 함
	14:05~ 15:00	3-1		국어	- 수/암 언어 배우기/ 기탄국어 - 훈민정음 제 1과	어휘, 문장을 배움
6/9 (화)	13:50~ 14:30	1-2		국어 수학	어휘력 기르기 -'ㅏ ㅓ'가 들어가는 낱말 알기(복습) - 바르게 쓰기/ 기조연산문제	공부 잘함
		2-2		결석		잊음
6/11 (목)	13:50~ 14:30	1-3		국어	교과서: - 모음자, 자음자 배우기 - 낱말 알기, 배우기	
	14:05~ 15:30	3-3		국어	교과서: - 모음자, 자음자 배우기 - 낱말 알기, 배우기/ 훈민정음 제 1과	한국어 모름
	15:30~ 16:10	4-3		결석		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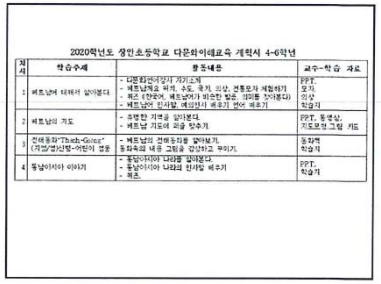
2. 다문화교육 운영의 실제

교원연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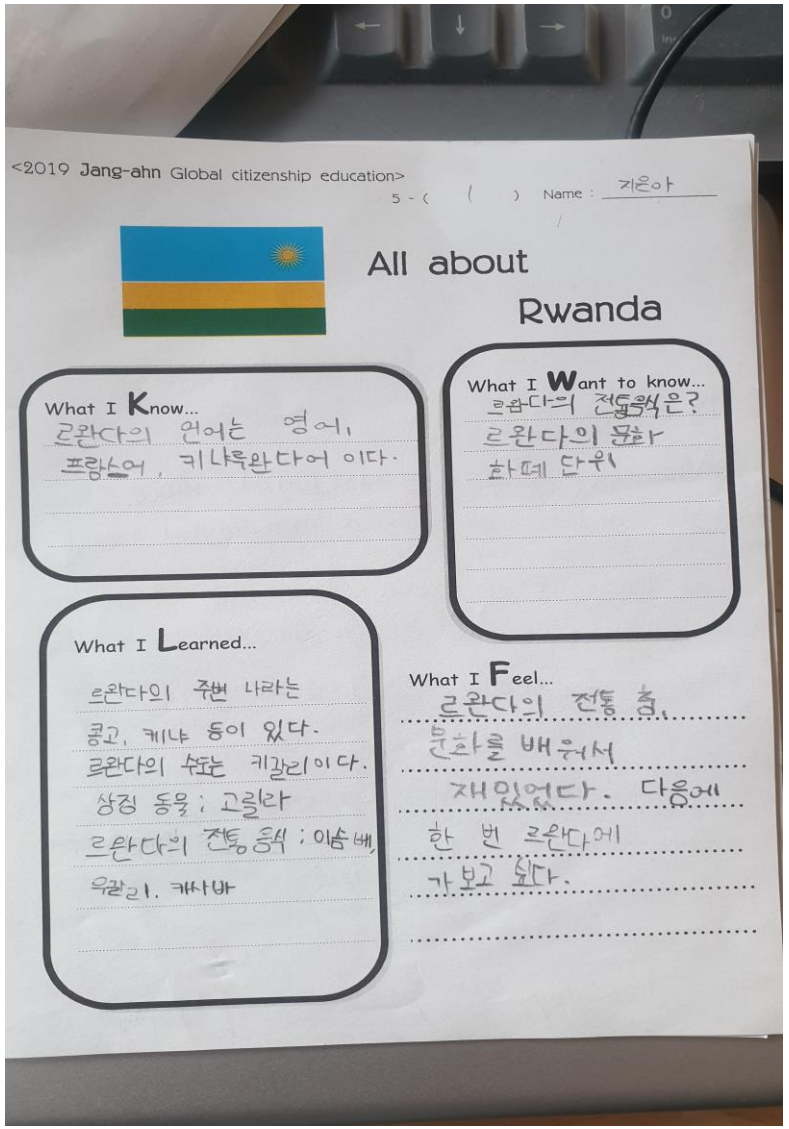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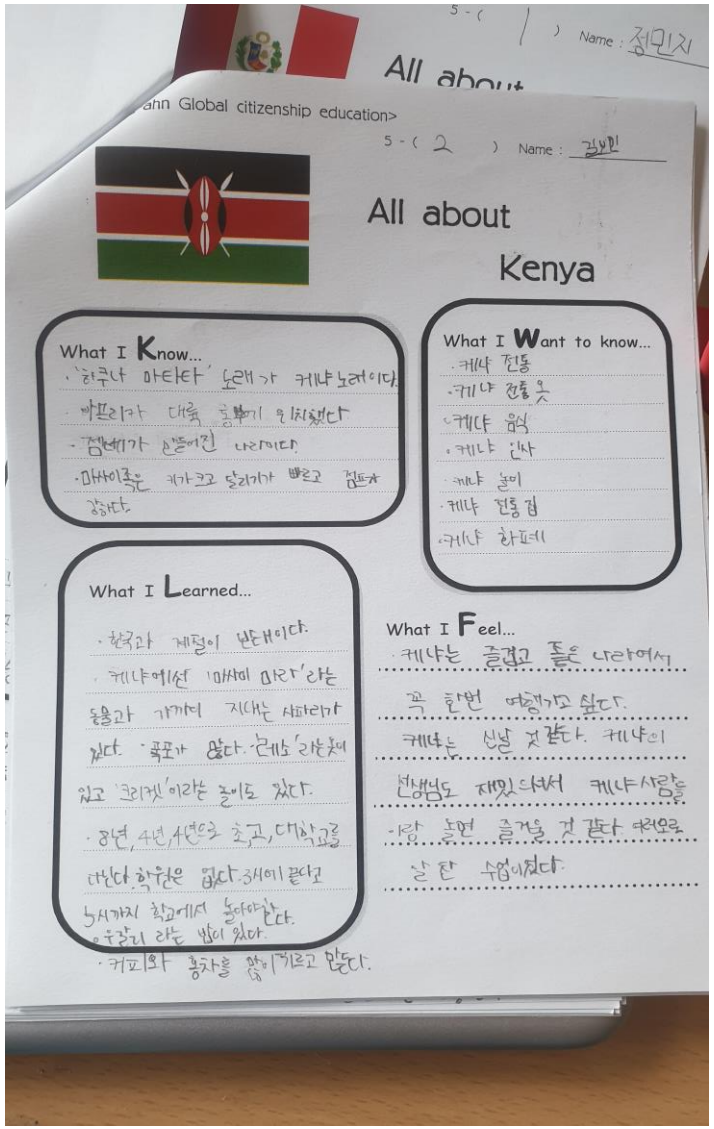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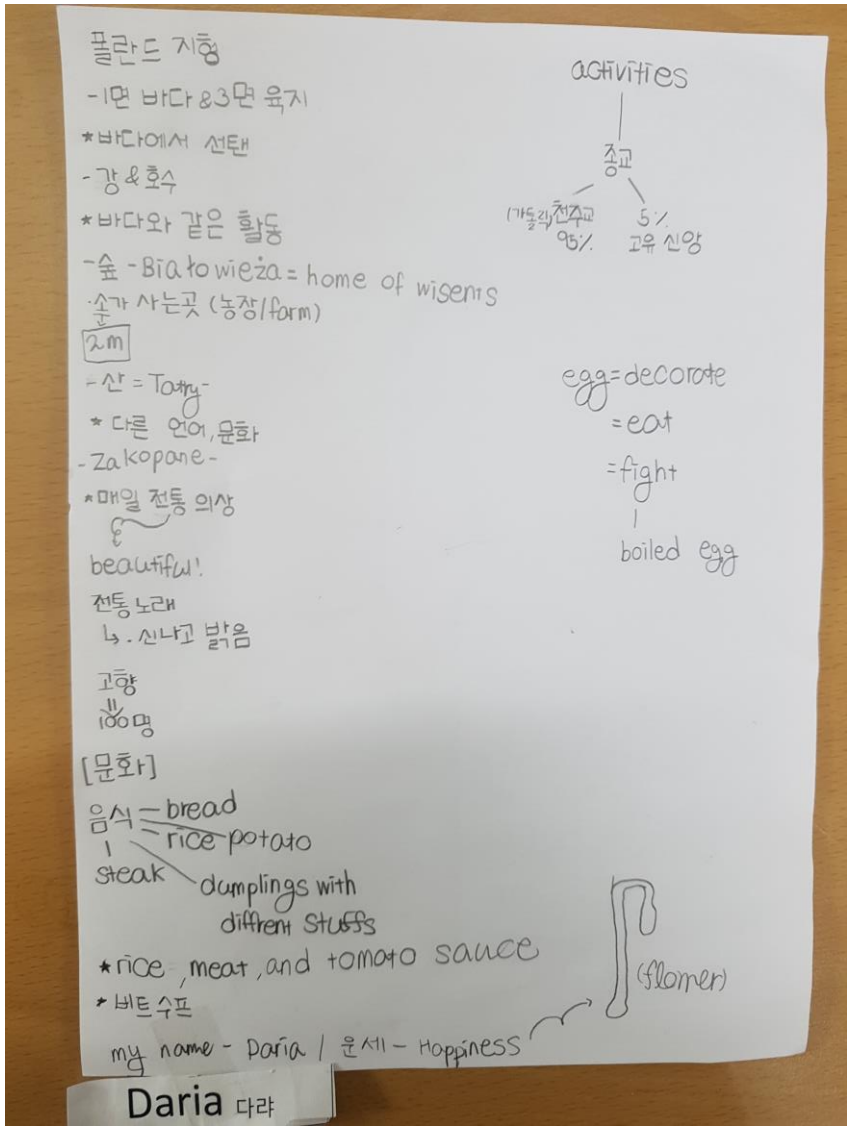




2. 다문화교육 운영의 실제







03. 다문화교육 운영에 대한 생각들

: 다문화교육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이야기
보다 나은 교실을 위한 아이디어

3. 다문화교육 운영에 대한 생각들

<긍정적인 점>

- 실제적인 세계시민, 다문화사회 학습
- 교사로서의 역량 증진
- 다양한 문화, 사회 직접 경험
- 외국어 학습 동기화
- 배려, 협동, 다양성, 나눔 등 가치 수업의 실제

3. 다문화교육 운영에 대한 생각들

<문제점>

-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 수준 문제
- 다문화학생들의 닫힌 태도
- 다문화학생 학부모님들의 태도와 상담 고충
- 한정된 수업시간, 지도 한계점
- 교사 지도 부담(교육과정, 연수 등)
- 다문화 강사 및 이중언어 강사들의 역량 문제 및 관리의 어려움
- 행정업무의 부담(개인정보, 공문보고 등)

3. 다문화교육 운영에 대한 생각들

<다문화학생들의 재학비율이 높은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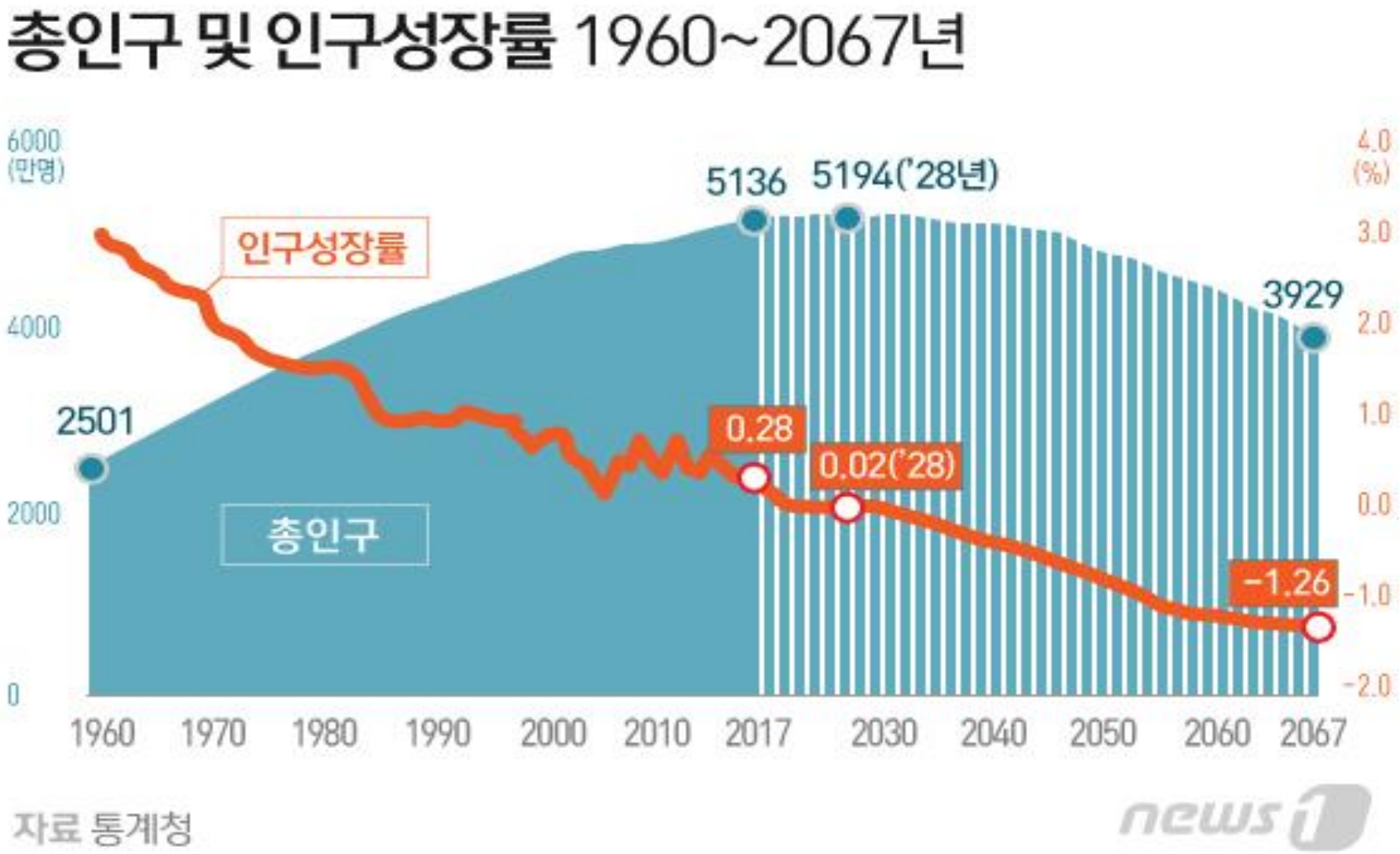
- 통합 수업의 어려움
- 다른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 이중언어
- 융화되지 않는 학생들

<다문화학생들의 재학 비율이 낮은 학교>

-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 어려움
- 단편적이고 편중된 다문화 교육
- 음식 등과 같은 편의 제공의 어려움
- 학생정보 문제
- 사회이슈에 따라 달라지는 교실 분위기

Thank you

대한민국 인구와 이민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년
6000
(만명)
4000
2000
0
4.0
(%)
3.0
2.0
1.0
0.0
-1.0
-2.0
인구성장률
총인구
5136
5194('28년)
3929
2501
0.28
0.02('28)
-1.26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7
2030
2040
2050
2060
2067
자료 통계청
news1

귀화 프로세스

홈 | 뉴스데스크 | 엠빅뉴스 | 14F | 뉴스인사이트 | 정치 | 사회 | 국제 | 경제 · 과학 | 스포츠

뉴스투데이 장유진 기자

"외국인 귀화 어려워진다" 국적 취득 제도 강화

입력 2012-06-21 07:51 | 수정 2012-06-21 08:26

외국인노동자 귀화 더 어려워진다

정부, 국적취득 앞서 영주권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 내기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재외동포 등의 국적 취득에 앞서 영주권을 먼저 얻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근로자 등의 귀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시안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면 가능했던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 등의 일반 귀화 신청을 5년 중 최근 3년 이상은 영주자격으로 체류해야 국적 신청을

증권 부동산 국제 골프 연예 VIDEO 해외주식라운지 AI Insight BIO Insight ESG The Moneyist 보도자료

사회

귀화시험, 더 어려워진다… 기존 객관식에 작문·구술 추가

입력 2018.02.22 18:54 | 수정 2018.02.23 02:55 | 지면 A35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필기시험이 어려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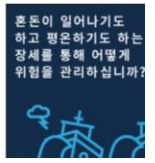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해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시험은 객관식 36개 문항과 작문 4개 문항, 구술 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객관식 문제 20개만 풀면 됐다. 작문 문제는 주어진 주제에 따라 200자 미만의 짧은 문장을 짓는 방식이다. 구술 문제는 지문을 읽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평가관이 묻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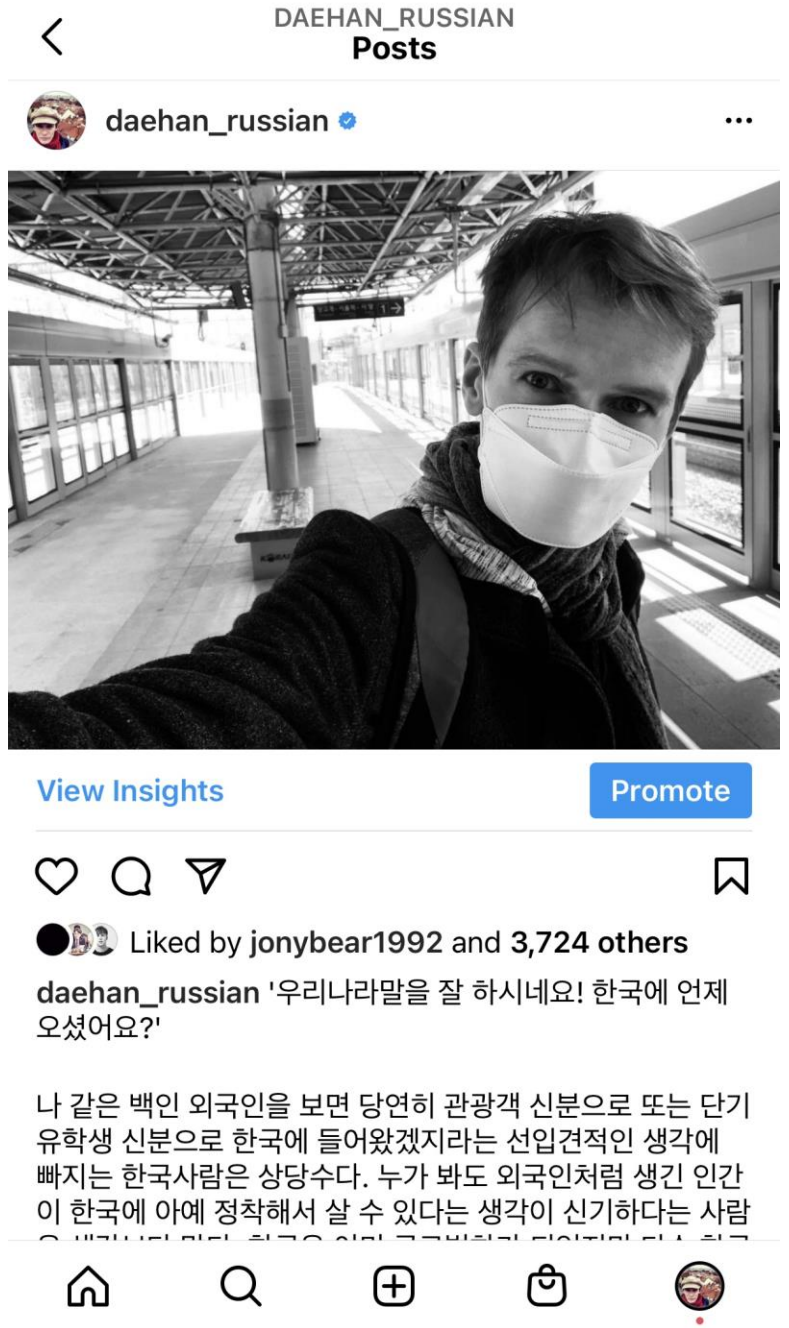
-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18건 추가 분석…"인과성 인정 어려워"
- 미 민주 상원 28명 '이-팔 충돌중단' 촉구…내부 불만 가중
- 이마트, 베트남 사업 지분 매각…프랜차이즈 전환

실시간

1 머스크의 사기극?…도
2 "자산 버블 결국 터진다
3 안정환 "내년까지만 방
4 美 해군이 촬영한 UFO
5 "신약 대박" 옛말…추락
"소변에 거품방울" 만
천안, 1년 새 집값 두



비자 등급이 어떻게 되세요?



- 외국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비자, F-2
- 대한민국의 ‘Green card’? 하늘에서 별 따기

절차 개선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취득 rule 개선 필요!

I·SEOUL·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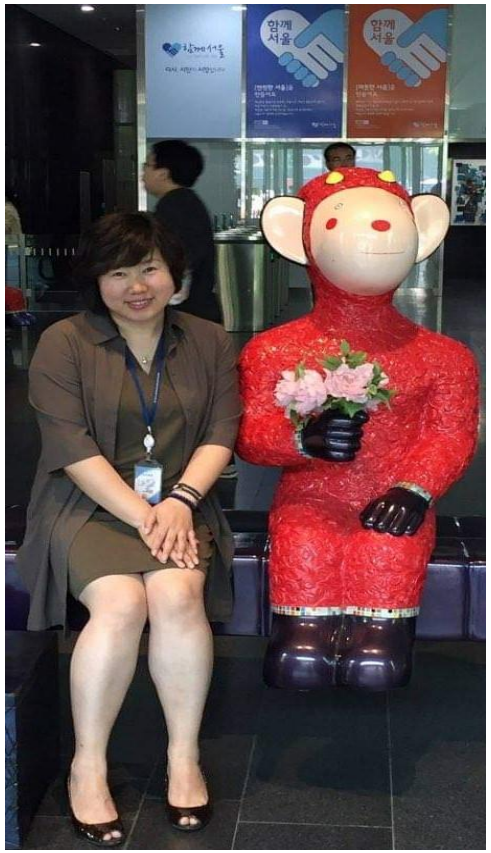
상호적인 사회통합

다양한 문화 하나되는 마음 다 가치

2021. 06. 02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 해 연



01 상호적인 사회통합

02 다양한 문화 답은 현장에

03 하나되는 마음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

04 다 같이 다 가치

Who am I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

조부모 (韓 **상주**) 부모 (中 하얼빈) **나**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서울시 공무원 **8년 차**

글로벌 정책요원

★정책 입안 및 집행자

★정책 수혜자

주요업무

★서울생활 살피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공무원·일반시민대상
- 어린이·청소년대상

상호적인 사회통합

1 수요에 맞는 정책

2 평등 존중

3 협력 공존

다양한 문화 답은 현장에

우리는 사회에 수혜자에서
당당하게
사회공헌에 참석한다!
이중언어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사회에 어울려요!
이주여성들의
제2고향 서울
자랑하기

2016년 하반기 성과보고회 및 표창수여식

제 1 회
黑龙江在韩精英群会
주최 : 흑룡강신문 한국지사

생에 주기에 맞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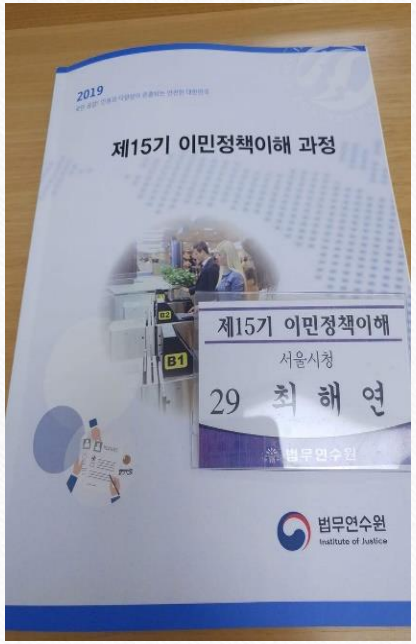
서울시 공무원 생활 8년차 된 중국동포 이야기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최해연 주무관

"같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서울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해연 주무관의 바램이다. "말로 글로벌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도 말한다.

다 같이 다 가치


2019
제15기 이민정책이해 과정
제15기 이민정책이해
서울시청
29 최 해 연
법무연수원
Institute of Justice

2019년 서울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세계인의날
서울특별시 기념행사

다 같이 다 가치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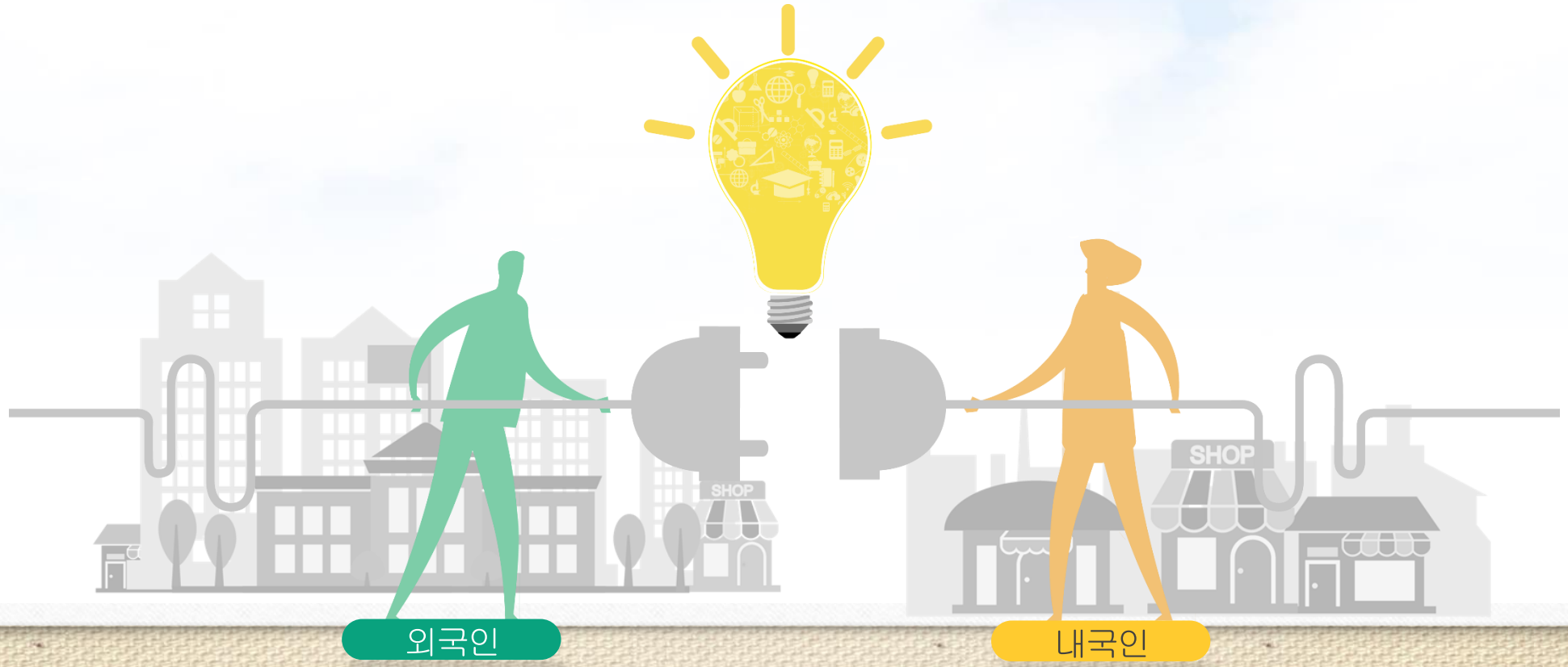
★ 서울타운미팅 개최

★ 외국인주민회의 운영

이제 우리 같이

다양성 문화, 하나되는 마음, 다 가치 있다!!!

같이 우리 가치



이민자들의 기다리는 날

5월 21일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

안녕하세요!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우즈베키스탄 상담원

YUSUPOVA NAZOKAT

(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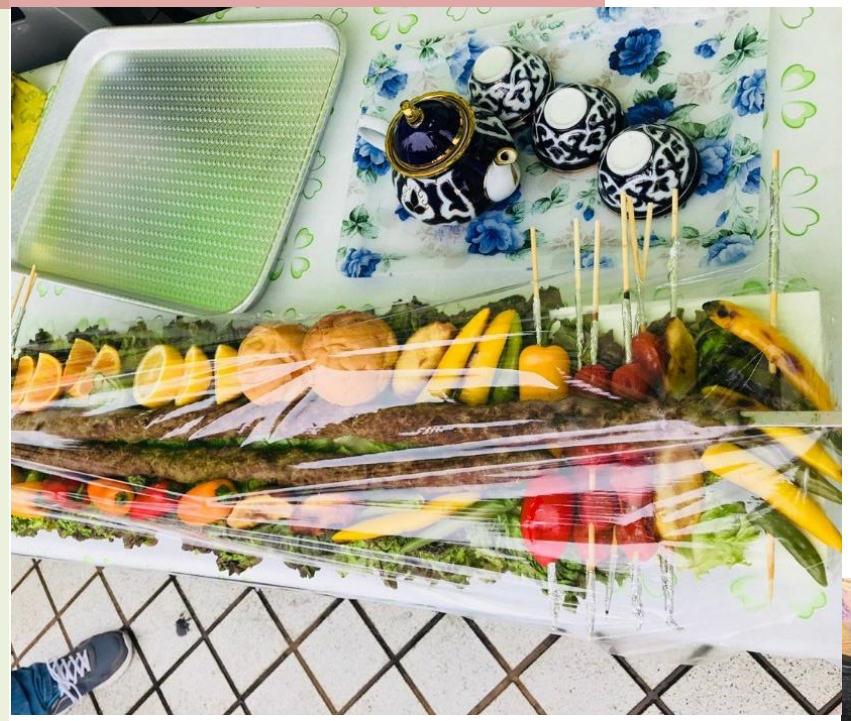
한국에 오기 전에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세계인의 날)을 몰랐습니다.

◆ 5월 21일은 국제연합기구인 유엔(UN) 2002년 제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 (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

◆ (한국 2014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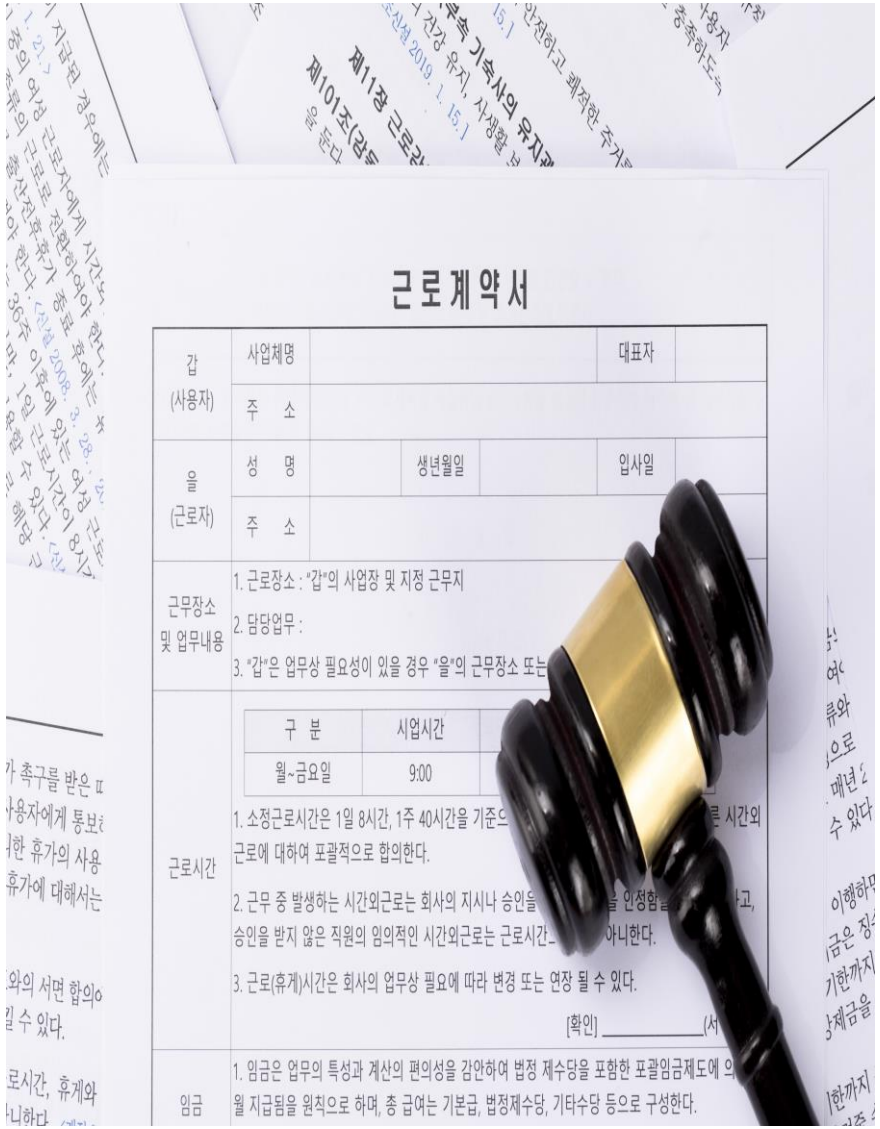
경기도 시흥시 “세계인의 날”

우즈베키스탄 공동체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다양한 나라의 문화, 음식 및 놀이 의상 예술 등으로 서로 존중하고 교류하였었습니다.

◆ 한국에 2000년 이후부터는 변화 중의 하나는 이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



◆ 한국의 외국인 인력 정책은 1991년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를 시작.

◆ 산업연수생제도가 법률적으로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했음.

◆ 1995년 산업연수생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로 인력 정책이 변경.

◆ 한국의 외국인 인력 정책은 여전히 저숙련 인력과 전문기술인력으로 인원화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

◆ 안타깝지만 특히 많은 이민자가 방문하는 곳 출입국과 고용노동부에서 차별 /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배려?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에서는 당사국이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 출신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법안에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 / 외국인들이 필요

이민자들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야겠다!

✓ 자녀교육 등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언어입니다.

감 사 합 니 다 ~